
인천광역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 운영 연구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인천광역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 운영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연구기관 (사)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 염신규 (사) 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

공동연구원 : 김정원 (사)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김현주 (사) 한국문화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보조연구원 : 김성림 (사) 한국문화정책연구소 행정팀장

Contents

제 1 장 연구 개요

1. 배경 및 목적	1
1.1 과업의 배경	1
1.2 과업의 목적	2
2. 연구 내용	3
2.1 문화정보화 관련 제도 및 정책방향 분석	3
2.2 인천문화재단의 문화정보화 관련 성과 정리 및 분석	3
2.3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비전 및 역할	3
2.4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운영 방향 제시	4
2.5 추진과제 도출	4
2.6 추진 방안 및 일정, 추진과제별 재정계획 제시	4
3. 연구범위 및 방법	5
3.1 연구범위	5
3.2 연구방법	5

제 2 장 정책 배경

1. 문화정보화의 개념과 분류	8
1.1 문화정보화의 개념	8
1.2 문화정보화의 분류	9
2. 관련 정책의 흐름	10
2.1 문화정보화 정책의 흐름	10
2.2 문화정보화의 발전 방향	18
2.3 문화정보화의 지역기반 구축의 필요성	21

3. 제도와 정책	25
3.1 중앙정부 문화정보화 제도, 정책	25
3.2 지역문화정보화 제도, 정책	27

제 3 장 이슈 및 정책 방향

1. 의견 수렴 및 분석	36
1.1 정책 전문가 자문회의	36
1.2 관계자 의견조사	48
2. 이슈 분석과 정책방향	61
2.1 문화정보화 전담 기관 지정의 근거	61
2.2 지역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역할과 위상	63
2.3 지역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의 주요 사업 방향	64

제 4 장 추진 체계 및 당면 과제

1. 추진 체계	68
1.1 문화정보화 정책 방향 전환	68
1.2 전담기관 지정 추진 프로세스	69
2. 당면 과제	70
2.1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 추진을 위한 선행 사업 실시	70
2.2 문화정보화 추진 준비 조직 운영	71
2.3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 제도 정비	76
2.4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 관련 기관의 역할	85

참고문헌

[표 목 차]

[표 1] 연구 구성	6
[표 2] 초기 문화정보화의 특성	14
[표 3] 문화정보화 정책의 시기별 흐름	16
[표 4] 한국문화정보원의 주요 기능	26
[표 5]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사업 이행 계획	29
[표 6]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주요사업 예시	30
[표 7] 지역정보화 전담조직 업무영역	72
[표 8] 문화정보화 전담조직의 업무 흐름	73
[표 9] 문화정보화 업무 분장	73
[표 10] 문화정보화 사업 조직도	74
[표 11] 문화정보화 전담부서의 인력조직에 관한 시기별 계획	75
[표 12] 기존 조례와 신규 조례 비교	82
[표 13]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수정안	83
[표 14] 인천광역시 문화정보화 시행계획 구성(안)	85

<그림 목차>

<그림 1> 2000년대 초반 국가 기관 문화정보의 양과 DB화 흐름	12
<그림 2> 인천문화정보 아이큐 화면	33
<그림 3> 서울시 문화정보화 협력 체계	45

제 1 장 연구 개요

제 1 장 연구 개요

1. 배경 및 목적

1.1 과업의 배경

- 관련법에 따른 지역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 운영 필요
 - 문화기본법 11조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③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음.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④항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조사·연구·개발 전담기관과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음.
-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따른 변화
 -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5년을 주기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함.
 -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수립·발표 (‘20.2.10)
 - 인천광역시도 관련 법규에 의거 <인천광역시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2020~2024)>을 수립하여 문체부에 제출하였음.

- 2020년 6월 문화부에 인천광역시가 제출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따르면 문화정보화전담 기관 지정이 시행계획의 과업으로 지정되어 있음.
- 인천시의 문화정보화 전담기구 지정의 근거와 위상, 주요 사업방향 도출 필요

1.2 과업의 목적

- 법령 및 상위계획에 따른 문화정보화전담기관 지정의 타당성 제시
 - <인천광역시 제2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를 대표할 문화정보화전담 기관으로 인천문화재단 지정의 명분과 타당성, 근거 등을 제시
- 문화정보화전담기관의 위상, 기능, 운영방안 제시
 - 문화정보화전담 기관으로서 인천문화재단이 지향해야 할 비전과 역할,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 내외의 의견을 수렴함

2. 연구 내용

2.1 문화정보화 관련 제도 및 정책방향 분석

□ 법 제도 및 상위정책계획 분석

- 관련 법률 및 제도 검토
- 새예술정책, 제2차 지역문화진흥계획, 제2차 인천광역시 문화시흥계획 등 검토 분석

□ 문화정보화 정책 검토

-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의 문화정보화 정책 방향 분석

2.2 인천문화재단의 문화정보화 관련 성과 정리 및 분석

- 문화재단 설립 이후 정보화 영역 및 기초 자료 조사 성과 정리
- 인천문화재단의 인천광역시 내에서의 문화적 역할과 의미
- 인천문화재단의 정보화 관련 유관 기관과 협력 사례 등 조사 및 정리

2.3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비전 및 역할

- 문화정보화 전담 기관으로서 인천문화재단의 비전 제시
- 지역문화 활성화와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의 논리적, 현실적 상관성 분석
-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의 역할과 지역 문화 활성화, 시민 정보화 서비스 관련 등 인천문화재단 역할 제시

2.4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운영 방향 제시

- 정보화 전담기관으로서 적정한 기능, 주요 업무와 과제 등 제시
- 정보화 전담기관으로서 기능과 사업을 구현할 적절한 인력 구성 방안 및 조직 위상, 재단 내 관련 업무 협력 등 제시
- 정책전담기관, 인천광역시, 유관 기관 등과 정보화 전담기관으로서의 협력 방안

2.5 추진과제 도출

- 정보화 전담 기관 지정에 필요한 인천문화재단과 인천광역시의 추진 과제 도출
- 정보화 전담 기관으로서 협력과 소통, 사업 등 중장기 과제 제시

2.6 추진 방안 및 일정, 추진 과제별 재정 계획 제시

-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을 위한 추진 방안 및 조직
-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에 따른 일정 계획 제시
- 과제에 따른 필요 재정 계획 제시

3. 연구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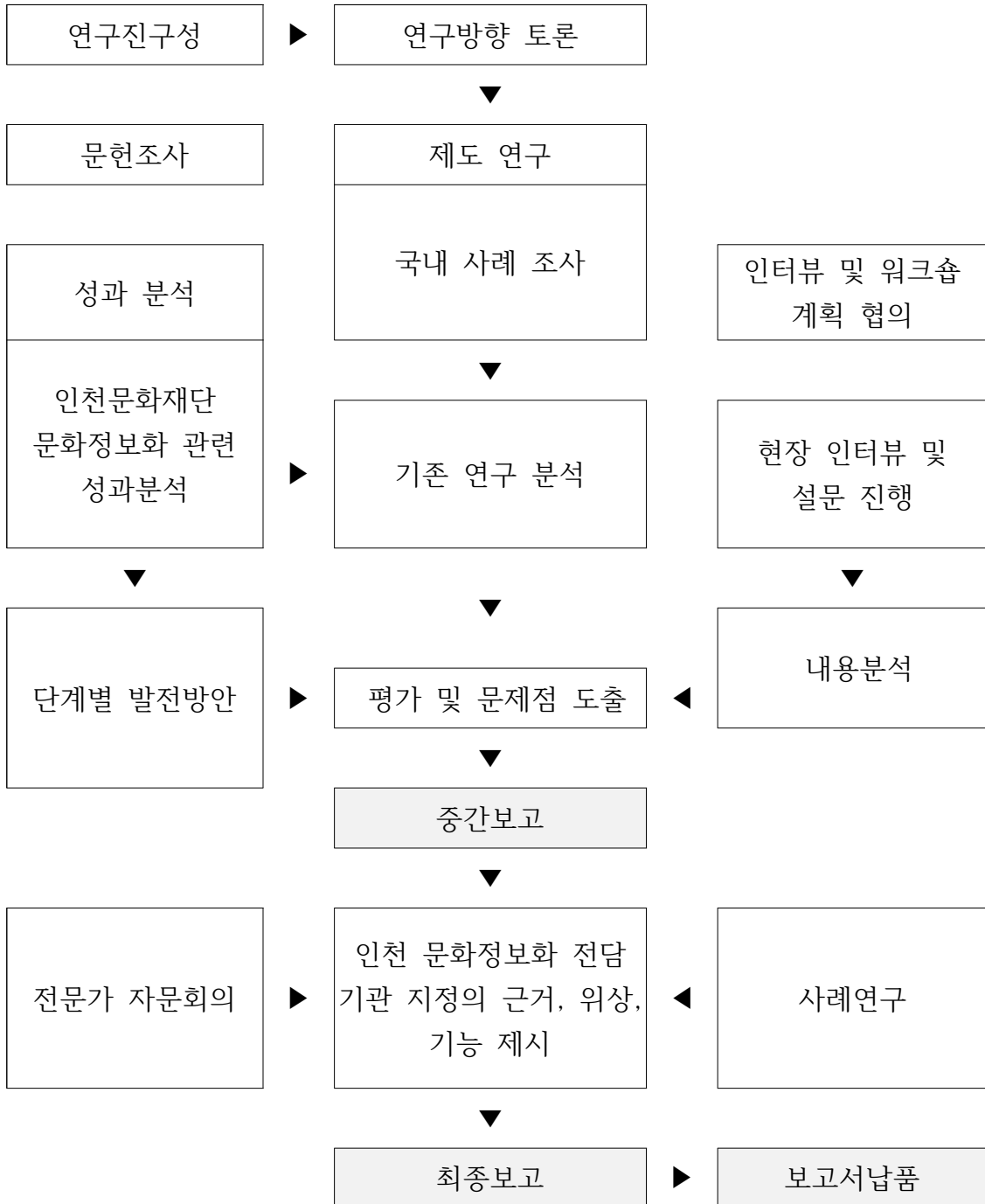
3.1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2020년 ~ 2024년(제2차 인천광역시 문화진흥시행계획의 계획기간에 준함)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3.2 연구방법

- 제도 및 정책 연구(문헌 조사)
 - 기존의 제도에 대한 분석 및 이에 따른 추진 현황 조사
 - 문화정보화 정책의 흐름 및 지역 차원에서의 적용 방안 연구
- 성과 및 현황 분석(성과 분석)
 - 인천문화재단의 지역 내 역할 및 문화정보화 관련 성과 분석
 - 인천 내 여타 기관들의 문화정보화 관련 성과 분석
- 전문가 및 관련자 조사(의견 조사)
 - 전문가 자문 회의 개최
 - 지역 내 문화 관련자에 대한 집중 설문
 - ※ FGI로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구조화된 질문에 의한 온라인 설문으로 대체함

□ 사업수행계획



[표 1] 연구 구성

제 2 장 정책 배경

제 2 장 정책 배경

1. 문화정보화의 개념과 분류

1.1 문화정보화의 개념

- 문화정보화는 문화와 정보화의 합성 명사로 각각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음
- 문화 : 한 사회의 구성원이 소유/공유/전승하는 예절, 언어, 종교, 의례, 법, 예술, 신념 등의 규범,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 그리고 행동 양식을 총괄하는 것¹⁾
- 정보화(informatization)
 - 데이터를 정보로 생성하는 과정으로 정보로 생성하기 위한 총체적인 정보처리과정을 의미
 - 정보는 데이터를 특정한 목적의 의사 결정을 위해 가공한 형태라고 할 때 훌륭한 정보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그리고 적시성이 매우 중요
 - 정보화는 정보처리 과정을 통한 데이터의 '지식화'의 과정으로 재정의
- 문화정보
 -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인류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모든 지식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고 할 수 있으며 즉, 인류의 삶 자체가 문화를 형성하여 왔고 삶을 통해 얻은 지식이 문화정보로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1) 문화정보화 정책방향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2010

- 문화정보의 분류
 - 일반인들의 보고 즐길 수 있는 문화정보인 대중 문화정보(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등)
 - 공공목적의 문화정보인 공공 문화정보(유적, 유물, 역사자료 등)

- 문화정보화의 정의
 -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체육, 도서관, 정보화 여건 조성 등 인간이 살아가는 삶과 관련된 데이터를 창출, 수집,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정보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이것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고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러한 문화정보화 체제 구축을 위한 조직 및 인프라의 정비, 데이터의 보존 및 양성 체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정의
 - 한 사회의 예절, 언어, 종교, 의례, 법, 예술, 신념 등의 규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 그리고 행동 양식을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화/지식화하며, 이를 관리/보존하고 동시대 사회 구성원이 소유/공유/향유하게 하고, 미래 사회 구성원에게 전승하게 하는 총체적인 과정

1.2 문화정보화의 분류

- 문화의 대상 기준으로 온라인 문화정보화와 오프라인 문화정보화로 구분

- 수요자를 대상으로 분류할 때는,
 - 전문가(문화인) 대상 문화정보화 / 비전문가(일반인) 대상 문화정보화
 - 전문가(문화인) 대상 문화정보화는 문화 계승자, 예술인 등 문화 전문가들의 창작활동, 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보화를 의미

- 비전문가(일반인) 대상 문화정보화는 일반 국민들의 문화 소통과 향유를 위한 정보화 과정을 의미
- 문화의 형태에 따른 분류로는 유형문화 정보화와 무형문화 정보화로 분류
- 문화 분야의 범주를 차용한 분류로는 문화예술정보화, 문화유산정보화, 문화산업정보화, 관광정보화, 체육정보화, 도서관정보화 등으로 분류

2. 관련 정책의 흐름

2.1 문화정보화 정책의 흐름

□ 문화정보화 정책의 특성

-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정보화는 매우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평가됨
 - 광랜(Lan) 등 정보화의 기반이 되는 IT인프라가 90년대 중후반 매우 빠르게 정착됨
 - 빠른 IT환경의 정착에 따라 인터넷 사용 역시 2000년대 초반 대중화가 이루어짐
 - 2010년을 기점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영역에서 온라인 환경이 빠르게 정착됨
- 이에 따라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방대한 양의 문화정보가 우리나라 문화정보화 발전의 단면을 보여줌

- 한국은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국가들 중의 하나로 도약하였으며 이러한 도약은 그 당시 정보화가 생소했던 우리나라 문화 분야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
- 문화정보화는 한국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변화되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문화"와 "정보화"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개념에서 비롯된 대립적 특징을 갖음
 - 자유로운 다양성을 갖는 문화와 획일적인 표준화를 기본으로 하는 정보화라는 형태로 나타남(다양성 / 획일적 표준화)
 -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는 문화 정보는 폐쇄성이 강하여 소장 기관의 소유의식이 매우 강한 특성을 갖고 있으나, 온라인의 컴퓨터 자료는 원소스 멀티유즈(One-sourcemulti-use)의 개방적 특성(폐쇄성 / 개방성)
 - 문화정보화 정책은 이런 대립되는 문화정보화의 지향 사이를 중재하며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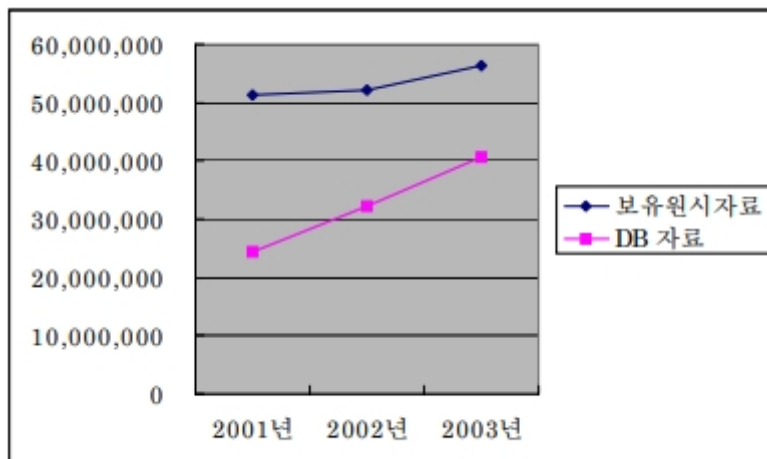
□ 도입기 문화정보화 정책의 추진 흐름(1990년대 중반 ~ 2002년)

- 초기의 국가 주도 문화정보화 추진
 - 도입 시기 국가 문화정보화는 마치 산업화시대의 경제개발 전략과 유사한 매커니즘으로 진행
 - 초기에 진행된 문화정보화 사업들은 공공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컴퓨터 자료화하여 서비스하는 과제들로 대부분 국가가 주도적으로 진행
 - 국가주도식 추진은 초창기 정보화에 대한 인식 부족과 투입해야 할 예산 및 인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
- 저장된 문화콘텐츠의 온라인 검색에 초점을 맞춰 진행

- 이러한 방식은 문서위주의 단편적인 정보 활용에는 적합하지만 기 구축된 문화콘텐츠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재가공 작업이 어려워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재생산이나 재활용에 많은 한계
- 웹2.0시대 이후의 문화정보화는 기존 구축된 1차 문화콘텐츠를 사용자들에 의해 보다 활용성이 높은 2차, 3차의 문화콘텐츠로 활발하게 재가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가 발생

○ 국가 주도 문화정보화의 한계

- DB대상 원천 자료량의 급속한 감소: 기존 자료 중심의 DB화는 2000년대 초반 한계에 봉착했고 원자료 수집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됨



<그림 1> 2000년대 초반 국가 기관 문화정보의 양과 DB화 흐름

- 다양한 문화정보 수집에 부적절한 기관 구조 : 정부 주도의 분류체계는 행정 위주의 수직적 분류 구조를 갖고 있어 지속적으로 융합과 분화를 지속하는 다양한 문화영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기에 부적절
- 공급자 입장에서의 양적 팽창 : 2000년대 초반 문화정보화 실태조사에서 정보 사이트 경험을 묻는 질문에 전체응답자의 79%가 불이

용을 답하는 등 공급자 위주의 정보의 양적 팽창은 이용에 있어서 활성화에 부적절

- 불안정한 서비스 체계: 초기의 각 기관별 문화정보 수집·관리는 문화정보 서비스의 불안정성을 초래함

○ 1차 정보 중심 문화정보화의 한계

- 인터넷이 도입된 90년대 초반에 시작되어 90년대 후반 IMF 시기에 정부 주도하에 대대적으로 실시된 정보화 근로 사업을 통해 문서상으로 존재하던 방대한 문화 자료를 온라인 문화정보 콘텐츠로 가공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대국민 서비스
- 현재까지의 문화정보화는 대부분 문화 영역별로 문서나 사물 형태로 존재하는 문서 및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해 해당 자료를 검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 기관별로 자신이 소장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문화 주제 영역별로 정보의 완결성이나 연계성이 다소 부족한 상황
- 즉,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위주로 문화정보가 정리되어 있어 사용자는 여러 기관의 정보를 별도로 검색하여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아직 많으며
- 저작권의 문제와 정보시스템 보안 문제가 대두되면서 시스템 침해 및 데이터관리 책임 등의 문제로 인해 서로 다른 기관과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작업이 다소 소극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며 특징을 일별해 보면 다음과 같음

□ 문화정보화 정책의 전문화 추진기(2010년 ~)

○ 문화정보화 방식의 변화

- 초기 물리적인 문서로 표현된 문화자료를 컴퓨터 자료화하는 것으로 인식

- 문화정보화를 도입되던 90년대의 목표이며 2000년대 이후 멀티미디어 자료를 대상으로 확장
- 정보화 사회에서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변화를 이후의 현시점을 고려할 때 문화정보화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넓게 다양하게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의 문화정보화가 과거 문화, 평가된 문화, 기록된 문화를 정보화하는 것이라면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국가별, 인종별, 영역별, 지역별, 그리고 연령대별 문화 향유 패턴 분석을 통해 개인에게 적합한 고품질의 문화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서는 각 문화 활동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고객별 성향에 맞춤형으로 검증된 문화정보를 서비스하는 고품질문화정보의 중요성이 강조
- 일방적인 정보의 축적 제공을 넘어서 사용자 관점에서 정보를 노출시키고 공유할 수 있는 쌍방향의 정보 개방성이 강조되고 있음

영역	내용
단위 문화 영역별 문화정보화	각 문화정보 소장 기관이 소장하는 자료만을 대상으로 정보화 작업 진행
양적 확장형 문화정보화	국가 문화정보를 소장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양적 확장형 진행
문서기반 문화정보화	문서나 사물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디지털콘텐츠화 진행

[표 2] 초기 문화정보화의 특성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담기관(현 한국문화정보원) 설립 및 근거 마련
 - 2002년 문화관광부는 현 한국문화정보원의 전신인 (재)한국문화정보센터를 설립하여 문화정보화의 전문성을 강화하려 하였고 이후 한국문화정보원의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갔음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연혁>

- 2002년 12월 (재)한국문화정보센터 설립 : 최초의 문화정보 전문기관 설립
- 2003년 문화분야 종합정보센터로 지정(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에 근거)
- 2009년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정보화업무규정 훈령 166조)
- 2010년 사이버 안전센터 전담기관 지정(사이버안전센터운영규정 훈령 132조)
- 2011년 문화체육관광 통계업무 지원기관 지정(통계관리규정 훈령 157조)
- 2013년 기타공공기관 지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013년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활성화 사업 이관
- 2014년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문화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문체부 장관 고시 제2014-0035호)
- 2015년 기관명칭 변경(한국문화정보센터에서 현 한국문화정보원으로)
- 2017년 문화정보화 기관 재지정

- 특히 문화기본법이 2013년 만들어짐에 따라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의 근거와 역할은 보다 명확해졌음
- 문화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문화정책 조사·연구 전담기관,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의 지정이 의무화 되었고, 2017년 만들어진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등 지정고시"(2017.8.1.)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문화정책 조사·연구 전담기관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정되고, 문화정보화전담기관은 **한국문화정보원**으로 지정됨

- 동법의 규정에 따라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정보화"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예술·문화유산·문화산업·관광·체육·종교·홍보 등의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에 맞춰 사업 수행

□ 문화정보화 정책의 현황

○ 문화정보화 정책의 시기별 흐름

구분	시기	주요 내용
도입기	1990년대 ~ 2002년	정부 산하 문화기관의 1차 정보 DB구축 검색서비스 개발 등
전문 기관 설립 시기	2002년 ~ 2010년	전문기관(한국문화정보원) 설립 전문기관 역할 강화 전문기관 법적 근거 마련
전문 서비스 개발 시기	2010년 ~ 현재	문화정보화 기획 및 총괄 조정 문화정보 개방 공유 및 활용지원 사이버 공간 안전성 강화 및 자원 효율화 문화행정서비스 혁신 및 대국민서비스

[표 3] 문화정보화 정책의 시기별 흐름

○ 문화정보화 기반 추진 현황

- 문화정보화 기획 및 총괄 조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정보화 기획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실감형 기술(AR, VR 등), 블록체인 등 신기술 관련 총 12건의 정책연구 및 정보화전략계획을 수행
- 문화정보 개방공유 및 활용 지원 : 2011년부터 공공문화정보 통합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보 연계를 시작하여 2019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및 산하기관 66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계하고,

타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74개 기관을 확대 연계하여 전체 140개 기관에서 총 85,181,796건의 데이터를 연계·통합하였고, '문화데이터광장'을 통한 데이터 통합검색 및 링크 서비스 제공

-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8대 문화 분야별 연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총 408종의 Open API 개방을 통해 민간 활용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국가 및 공공기관, 민간이 보유한 다량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망, 성과분석 등을 통해 정책에 활용하는 수요가 늘어남에 있어 문화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은 대폭 확산되고 있음
- 문화정보 교류공간의 안정성 확보사이버안전센터 관제대상 기관은 2011년(24개)→2013년(105개)→2015년(120개)→2019년(150개)로 문체부 및 문화재청의 소속·공공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업무를 확대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관제대상기관에 대한 새로운 사이버 위협이 확대됨에 따라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s, 지능형지속위협) 공격에 대응하고자 지능형악성코드탐지시스템 운영과 더불어 인공지능(AI) 기반의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
- 문화행정서비스 혁신 및 대국민서비스문화와 IT의 융합으로 문화정보화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소통과 협업 기반의 문화행정, 문화정보서비스 접근 편의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꾀하고 있음
- 한국문화정보원이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요약해보면,
첫째, 신규 정보화 기술을 활용하는 정책 및 사업 발굴
둘째, 문화정보의 개방적 공유를 위한 연계망 구축
셋째,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성 확보
넷째, 문화정보의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

2.2 문화정보화의 발전 방향

□ 생활문화 중심의 스마트 문화정보 서비스

-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목표를 위하여 5가지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 가운데 문화산업 분야와 관련된 국정 전략으로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추진
- 문화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먼저 제시하는 국민주도형(Citizen-driven Outside-in & Outside-out) 문화 정보화 디지털 서비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 문화·예술·스포츠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시민 주체성이 확립되었고 휴식과 여가가 있는 삶이 생활의 중요한 지표라는 인식이 보편화
-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선제 대응 및 문화정보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전략이 총체적인 방향으로 추진
 - 국민의 문화·예술향유, 스포츠 참여, 관광복지 여건을 조성하고 시간·비용·프로그램 등 지원을 확대하여 문화 격차 완화
 -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 지원 확대, 예술인 창작의 자유 보장과 창작 여건 조성, 문화산업 생태계의 공정성 강화로 사회의 창의 수준을 높이고 문화 부가가치를 극대화
 - 문화 행정체계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 문화 분야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매개 인력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문화정보화의 방향을 잡고 있음

□ 문화, 관광 콘텐츠 발굴 및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 시민 의식 및 사회 제도의 변화와 지능정보 기술 발전이 급부상하는 환경에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들은 문화콘텐츠 강국을 구현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 콘텐츠를 발굴하고 고객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
- 관광 산업 분야에서는 다양한 관광데이터를 모바일 기반의 5대 서비스(여행, 비즈니스, 의료관광, MICE, 관광 인력 포털) 체계로 통합하고, 전국 관광데이터를 다국어로 제공하여 편의성을 제고
- 문화예술·지원 산업에서는 기존에 국민이 접하기 어려웠던 문화자원을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실감 콘텐츠로 제작하고 관련 체험관을 조성

□ 지속성장 가능 문화 IT 생태계 조성

-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미래도약과 성장을 위한 핵심 비전에서 기계의 지능화(AI, Artificial Intelligence)를 통한 고도의 생산성 향상으로 산업구조의 근본이 변화될 것을 예측
 -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기술로 구성된 '지능정보기술'을 핵심 변화동인으로 제시
- 지속성장 가능 문화 IT 생태계 조성은 문화 정보화의 기초가 되는 필수적 사업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마중물이자 콘텐츠 산업 재도약의 바탕으로서 큰 역할을 수행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의 新 ICT 기술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제작 및 생산, 공간 정보, AI 기반 등의 문화데이터 유통, 시장

- 활성화를 가능케 하는 장기 계획의 전략 과제들로서 활발하게 추진
 - 유통·금융업 등에서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으로 차세대 정보서비스 채널로서 보편화를 이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서비스에 주목
 - 문화산업 분야에서도 이용자가 체험한 문화에 대한 영상, 글 등의 정보를 SNS 채널을 통해 공유하고 홍보하는 등의 경험 마케팅 및 디지털 마케팅이 급속하게 확대
 -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시선을 끌 수 있는 기술 및 디지털트렌드를 활용한 효율적인 홍보 방안이 마련
- 창의적 문화 디지털 지능 사회 조성
 - 제6차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년)에서는 ICT 융합 선도 분야, 창의적 ICT 활용촉진, 제도적·기술적 ICT 환경 등 3대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을 중점적으로 제시
 -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창의적 ICT 활용촉진과 같은 방향성을 가진 창의적 문화 디지털 지능사회 조성을 정보화 사업의 큰 축으로 삼아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 체계와 공정한 문화생태계 구축을 지향
 - 해킹과 침해로부터 자유로운 사이버 안전 체계 강화 및 정책·업무 포털의 안정적 운영과 예술 창작자의 계약, 보조금 신청 처리 관련 투명한 서비스 제공
 - 공정한 문화 행정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학교와 연구소 및 산업이 문화콘텐츠와 서비스를 기획하고 창작하는 자유로운 환경을 지원
 - 산학연 참여 혁신 환경을 구축하며, 문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소속·공공기관의 문화정보화 추진체계 수립 및 강화 등

- 문화산업은 미래를 주도하는 중요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창의성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새로운 분야의 산업으로 인식
 - 창의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사회문제를 풀기 위한 원천 가치로서 큰 의미를 가진 만큼 성공적인 창의적 문화 디지털 지능사회 조성은 문화자원의 융합 역량과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을 강화·확대
 -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융합 기술이 문화기술의 새로운 키워드로 부상하여 문화산업의 패러다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하여 문화기술(CT)의 개념 또한 확장 및 재정립

2.3 문화정보화의 지역 기반 구축의 필요성

□ 문화정보영역에서의 거버넌스 체계의 중요성

-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전개되면서 문화를 활용한 문화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증대
 - 과거 중앙정부의 지원방식과 달리 도시의 자생력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기업의 문화적 가치의 확산 속에 민관협력 문화마케팅이 상호호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도시와 기업은 물론 시민 그리고 문화예술 모두가 상생하는 성공적인 문화 거버넌스 모델 형성이 가능
 -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창의적 ICT 활용촉진과 같은 방향성을 가진 창의적 문화 디지털 지능사회 조성을 정보화 사업의 큰 축으로 삼아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 체계와 공정한 문화생태계 구축을 지향
- 개방형 조정방식과 ICT 거버넌스의 발전
 - 우리나라는 장기간 중앙집중적인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문화영역의 대국민 서비스와 내부 업무효율을 제고해왔으나 지역분권의 시대를

맞아 거버넌스와 분권의 지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문화 거버넌스의 주요 목적은 문화 기관과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뿐만 아니라 문화 및 관련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있음
- 즉 지역 안에서의 문화정보의 플랫폼을 확보하여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을 실제적으로 전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과정의 개방과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다양한 행위자가 수평적 관계에서 상호협력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방식인 개방형 조정방식(Open Method of Coordination)의 정착과 문화분야의 ICT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

□ 문화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 문화정보 플랫폼의 구축 필요

- 문화의 일상적 특성 : 문화는 특정 시점이나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 향유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체화되고 제공되며 향유되어야 함
 - 지역 및 세대 간 발생하고 있는 문화 향유의 격차는 공급 및 소비의 불균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문화정보서비스를 개선하는 전략은 지역 및 세대 간 문화 향유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함
- 문화의 일상성은 지역 단위 문화정보 플랫폼 구축을 기반으로 한 문화 거버넌스의 중요한 근거
 - 공급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역 및 세대 간 문화 향유 격차의 발생요인으로는 예술인 편중 현상으로 인한 지역 및 세대 간 문화콘텐츠 공급의 불균형을 들 수 있음
 - 지역 내 생활문화 동호회와 같은 아마추어 단체나 개인 예술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콘텐츠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지역 내 자체적인 콘텐츠 생산과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필요
- 지역기반한 문화소통구조를 정착하기 위한 문화정보 플랫폼의 필요

- 전문 예술가에 의해 창작·제작된 문화예술콘텐츠를 제공하는 과정 역시 지역 및 세대 간 문화 향유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문화예술콘텐츠를 제공하는 과정 안에는 문화기반시설, 문화매개인력, 문화예술교육 담당자의 지역 간 격차가 존재
- 따라서, 매개역할의 부재로 인하여 지역 및 세대 간 문화 향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지역에서의 문화매개서비스 제공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이한 지자체 과제

- 지방자치의 정착과 이에 따른 적극적 역할 제기
 - 지방자치는 '지역의 사정을 해당 지역이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증명하기 위한 제도적 실천
 - 따라서 지자체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필요
 - 정보화는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을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지역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사물인터넷을 이용하는 등의 활동이 대표적인 예
- 지자체의 정보화 사업과 활용에 있어서 문화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님
 - 지자체가 문화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디지털을 이용하는 방법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디지털 아카이브는 각종 정보나 지적 자원을 디지털 정보로 바꾸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일종으로 항구적인 보존과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 문화의 이용과 보존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주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손쉽게 체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광역 단위 문화정보정책 기관의 필요성

- 문화 정보의 양적 증대와 빠른 변동(공급의 측면)
 - 문화정보의 양적 증가와 변동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문화정보화 정책사업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시키고 있음
- 지역에서 필요한 정보의 생산과 유통(수요의 측면)
 - 현재의 중앙정부-산하기구 중심의 문화정보화는 그 자체로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지역에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생산하고 관리하는 데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
 - 지역의 수요에 맞춤형 문화정보 관리 시스템 필요
- 지역문화정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문화정보 능력의 필요(문화적 자생력의 측면)
 - 지역문화진흥법 이후 지자체 단위로 지역문화진흥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음
 - 정보에 기반 하지 않은 지역문화정책은 객관성에서 한계를 갖으며 이에 따라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정보를 축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능력이 반드시 필요함

3. 제도와 정책

3.1 중앙정부 문화정보화 제도.정책

(1) 기본 체계

- 문화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문화정책 조사·연구 전담기관,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이 지정되는데 2017년에 만들어진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등 지정고시”(2017.8.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문화정책 조사·연구 전담기관 및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관 등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기관, 문화정책 조사·연구 전담기관 및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문화정책 조사·연구 전담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3.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 한국문화정보원**

(2) 문화정보화 전담 기관의 기능과 사업

□ 한국문화정보원의 기능

주요 기능	
	1.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정보화 추진체계 지원
	2. 문화정보화 및 문화지식관리시스템 기획 및 중장기 방향 연구의 지원
	3. 문화정보화 및 문화지식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4.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문화정보화 사업 발굴·추진 및 지원
	5. 문화정보화에 대한 지표의 조사·개발, 통계자료의 관리 지원 및 문화정보화 관련 정보의 출판·보급 지원
	6. 문화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지원
	7. 문화정보시스템 및 지식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8. 문화정보시스템 연계·통합 및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표준 개발 지원
	9. 문화정보화사업 평가지침 개발, 문화정보화사업 평가 및 지원
	10. 문화정보화 기술개발 연구
	11.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 및 법령·제도 개선방향 연구
	12. 그 밖에 정보원의 설립 목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사항
	13. 문화관련 동영상콘텐츠(UCC) 생산 및 관리, 문화PD 양성 및 문화네트워크 관리
	14. 문화정보화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시설 운영
	15.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신탁관리 및 관련 사업

[표 4] 한국문화정보원의 주요 기능

□ 한국문화정보원의 주요 사업

- 문화정보서비스 및 이용확대 : 문화포털(문화정보 검색 서비스, 문화혜택서비스)
- 국내외 문화영상 제작 및 서비스 (문화 PD 사업, 기획영상, 문화영상 서비스 채널)
- 전통문화 통합서비스 : 전통문화포털, 한민족 문화정보 발굴 및 보존

3.2 지역 문화정보화 제도정책

(1) 중앙 정부의 지역문화정보화 정책 방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문화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권한의 이양, 재정자율성 확보와 더불어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통계의 생산·관리·유통이 필요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관 등 국내정보와 국외 주요 선진사례, 주요 문화자원 등에 관한 원활한 정보획득과 주체 간 쌍방소통이 필수적임
 - 공공부문(중앙정부, 지자체) 문화 사업은 지속 확대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 제고가 요구됨. 이를 위해 문화 관련 정책사업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실시간 가능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 ※ 사업 중복성 지양, 성과 관리 및 집행 투명성 제고, 지자체간 융합·협력사업 확대 등

□ 문화비전 2030(2018년)

- 2018년 5월 발표된 “문화비전 2030 - 사람이 있는 문화”에서는 9대 대표 과제의 6번째 과제로 “지역문화분권 실현”을 제시함
 - “지역문화분권 실현”의 실천 과제 2번째로 “지역 내 문화자치 역량을 위한 기반 조성”을 꼽고 있는데 주요사업으로 지역문화진흥 관련 정책수립·집행을 위한 문화정책 전담기관 및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활성화가 포함되어 있음

◀ (정책기반 구축) 지역문화진흥 관련 정책수립·집행을 위한 문화정책 전담기관 및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 활성화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조사·연구·개발·집행을 위한 문화정책 전담기관 지정
- 지역문화 관련 조사 결과와 통계 관리 및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 조사·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

□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년)

- 2020년 2월 발표된 “제2차 지역문화진흥계획”(2020~2024)에서는 추진과제1로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을 강조하며 문화정보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행과제로 “지역문화 기초 데이터 생산·관리 개선”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제시함

- (통계조사) 지역문화 관련 종합적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지역문화현황통계(3년주기)」의 주기 단축, 활용도 제고 등 개선을 통해 **지역 스스로 정책 분석·수립할 수 있는 기초통계 기반 구축**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역문화 관련 통계·정보를 체계적·통합적으로 수집·생산·관리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지역문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추진방향

- 목표 : “지역과 현장에 기반한 포용과 혁신의 문화정보 플랫폼 구축”
- 지역과 현장에 산재한 다 영역의 문화정보를 통합·수집하고, 고급 예술정보를 넘어 국민 생활 속의 다채로운 문화자원과 활동을 수용

- 주민, 예술인, 문화기관 및 인력, 사업체, 정부 및 지자체 등 민간과 공공의 이해관계자 모두가 뒤처짐 없이 활용하고, 이를 통해 국민생활, 예술창작, 공공문화서비스, 행정을 혁신

□ 추진 내용

- (계획 수립)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의 기본개념, 방향 및 추진전략 도출을 위한 종합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20), 업무과정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20)
- (시범사업 추진)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에 앞서 최적화된 시스템 모델 구축을 위한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범 사업 추진 ('20)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역문화통합정보화시스템'의 본격 구축·운영 ('21~)
- (문화공간정보 제공)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과 연계, 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관련 전국적 현황을 제시하는 지역문화공간정보서비스 추진 ('22~)

○ 이행계획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5년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사업 종합연구 및 ISP/BPR수립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스템 고도화, 관련 행정업무 정비	시스템 고도화, 관련 행정업무 정비(계속)	통합정보화 사업 관리 조직 운영 및 유지보수

[표 5]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사업 이행 계획

○ 주요 사업 예시

범주	분류	정보수집/제공내용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정보	문화시설	문화시설, 생활문화시설 정보 - 문화기반시설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 생활문화시설 : 생활문화센터, 작은영화관 등 - 기타 문화시설 : 주민센터, 복지회관
	문화서비스	국공립 문화시설 및 정부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행사, 축제, 교육 등)
공간정보	장소기반형 문화사업 정보	문화도시, 문화특화지역,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 등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 행사 개최도시
행정/공공사업 정보	법제도/계획	법령 및 제도(조례 등) 중앙과 지자체의 계획
	예산	문화관광 예산 현황
	문화사업	문화분야 보조사업 정보
지식정보	주요 지표 및 정책연구 정보	주요지표, 현황 계획 및 정책정보 연구보고서, 통계보고서
	조사, 통계데이터 정보	문화관련 수요/공급 원데이터 통계자료 문화관련 빅데이터
인력 및 일자리 정보	인력정보	전문예술인 문체부 및 유관기관의 인력양성사업 배출인력정보 구직자 개인정보(직접 등록)
	일자리/교육 훈련정보	문화부문 공공/민간 일자리 정보 각종 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 정보
기타 서비스	여론조사 등	문화관련 각종 설문 등

[표 6]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주요사업 예시

(2) 인천시의 지역문화정보화 정책 방향

□ 인천시의 정보화 현황

- 2019년 인천 2030 미래이음 종합계획
- 2019~2023 제5차 인천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
- 인천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운영
-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큐 아이큐(<http://iq.ifac.or.kr/>) 운영
- 아이큐 모바일 앱

□ 인천시의 문화정보화 사업의 흐름

- 인천시 정보화 사업은 “인천 2030 미래이음 종합계획”과 같이 다른 지자체에서 시도하지 않는 종합계획의 제시와 같이 선도
- “제5차 인천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처럼 국가 주도 정보화기본계획에 흐름을 따라가고 있음
- 인천문화재단은 홈페이지와 문화정보 어플리케이션인 아이큐를 통해 각종 문화예술 공연, 전시, 활동 정보를 제공
 - 예약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문화정보화의 최일선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 인천연구원은 자체적으로 「도시정보센터」를 통해 지역정보의 아카이빙 및 활용 방안 모색
 - 인천의 역사·문화·사회에 대한 인문 자료 구축, 도시 기초 통계자료 분석·가공·생산, 도시정보 DB구축, 정기간행물 발간 기획 및 출판물 편집·발간을 하고 있어 인천시 도시 정보 관리

□ 인천문화재단 문화정보 사업

① 홈페이지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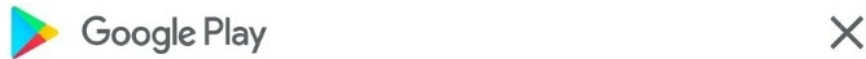
- 인천문화재단에서는 홈페이지 자료실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문화 정보 제공
 - 인천문화재단 연차보고서, 인천문화예술연감, 정책평가보고서, 정책포럼 결과, 생활문화센터 이용안내서와 같은 인천문화재단 관련 정보를 제공
 - 정책 자료실을 통해 인천문화재단 문화정책동향을 제공
 - 지원정보뱅크를 통해 각 기관의 공모사업, 활동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천문화유산센터를 통해 계간 인천역사통신과 학술회의 자료집, 영상자료, 사진자료, 도서자료를 제공
 - 인천문화통신 3.0은 인천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월간소식지로 인천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예술가들을 소개하고 인천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화현장의 소식을 전하는 웹진 서비스
 - 문화예술프로그램은행을 통해 97개 문화예술프로그램 정보를 제공
 -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공연 정보 어플리케이션 아이큐에 대해 소개하고 어플리케이션 다운 정보를 제공

② 인천문화재단 APP - 인천 문화예술공연 정보 아이큐

- 아이큐는 인천의 문화예술행사, 공연정보, 문화기반시설 및 위치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아이큐를 통해 인천문화예술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음
 - 아이큐는 분야별, 무료/유료, 날짜별, 관심시설별 문화예술공연 정보를 제공, 시설명/시설유형별, 지역별 문화기반 시설 정보 및 검색

기능, 할인티켓, 이벤트 등 문화예술공연과 관련된 다양한 부가정보 제공

- 관심 문화예술공연에 대한 스크랩 기능, SNS, 문자전송을 이용한 쉬운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다.



인천문화정보 아이큐

인천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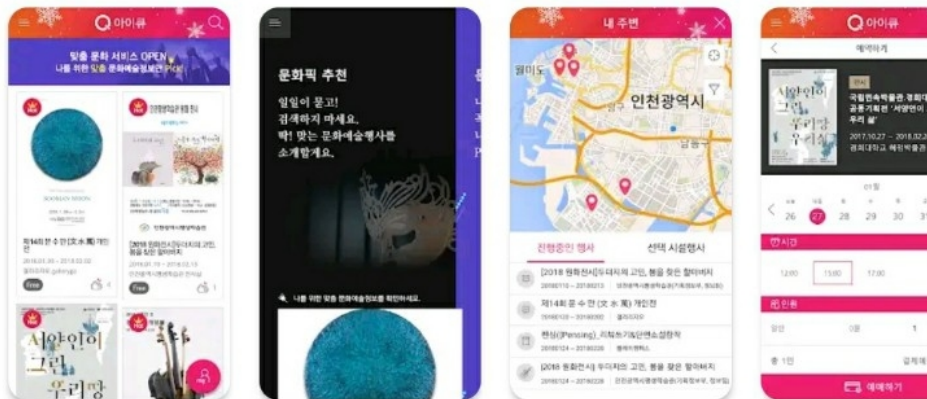
4.3★
리뷰 25개

1만 이상
다운로드

3
만 3세 이상

추가 정보

설치



일일이 묻고 검색하지 않아도 인천의 모든 문화예술행사와 공연시설 정보를 한 눈에~

<그림 2> 인천문화정보 아이큐 화면

□ 인천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

- 인천광역시도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제2차 지역 문화진흥 시행계획(2020~2024)>을 수립하여 문체부에 제출했으며, 이에 따르면 문화자치 기반조성을 위한 전략 및 핵심과제인 문화자치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한 시행계획 과업으로 “지역문화정책 및 정보화전담 기관 지정”이 제시하고 있음

- 인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도 제12조 계획수립 등에서 문화예술 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2조 (계획수립 등<개정 2008-06-23>)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예술의 육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1-16>

1. 시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제시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 4. 문화예술 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관한 사항**
5. 문화공간 등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6. 국제문화예술 교류추진을 위한 사항
7.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자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삭제 2015-09-30>

제 3 장

이슈 및 정책 방향

제 3 장 이슈 및 정책 방향

1. 의견 수렴 및 분석

1.1 정책 전문가 자문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 기본 정보

○ 자문회의 방식 및 내용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인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연구의 기본 전제와 프레임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와 인천시의 정보화 정책 현황 및 지역 문화정보화 정책 방향을 개괄함
- 인천 지역 문화정보화 정책의 지향을 점검하고 인천문화재단의 문화정보화 현황 및 인천문화재단이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에 관해 논의

○ 서면 자문

- 코로나19로 인해 자문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전문가에게 서면 질의를 통해 자문을 받음.

□ 전문가 자문회의 요약

① 현재 공공 문화정보화 현황에 대한 문제점 분석

○ 급증·변동하는 문화정보에 대한 대응력 부족

- 정보화기술의 발달과 수요의 폭증으로 인해 정보를 수집하는 양은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정기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자료들이

- 있으나 자료수집 간격이 4~5년에 이르고, 그마저 전년도 정보를 다음해 6~8월이 되어야 수집되는 정보가 됨
- 수집된 정보의 오류는 수정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틀린 정보와 요구되는 정보와 다른 정보를 양산하게 됨
 -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집계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정보의 경우에도 몇 가지 누락되는 정보들이 있으나,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거의 없었으며 실제 조사하는 내용들도 조사대상 기관 관계자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충분히 수집 가능한 정보들이임에도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
 -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경우에도 2019년 12월 발표되지만 실제로는 2019년 1월 1일 기준의 과거 데이터인데 게다가 이마저도 몇 달 간은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보내주는 엑셀파일들을 단순 취합한 자료에 불과, 이러한 자료들은 대부분 문서 자료들이므로 갖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 정보 수요에 대한 대응력 부족
 - 기존 실태조사에서 수집하는 정보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새로운 정보들이 더 존재함에도 기존의 지표와 데이터들에 대한 변경이 어려워 활용도가 떨어짐
 - 특히 이러한 자료조사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만 소비되는 정보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수작업이나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짐
 -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 필요
 -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국가정보화 사업에서 일괄적 지표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나 지역 내에서도 다른 분야의 정보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문화예술, 문화관련 정보들을 수집할 필요성은 지역의 문화기관(문화재단)에 높은 비중을

차지

- 현재 공공정보화 사업에 다양한 실효성의 문제가 있으며 자료가 쌓이기만 하고 활용도에 대한 고려가 부족
 - 현재 정보 활용도는 사업 베이스의 필요에 대응하는 정보의 구축으로 인한 단발성 정보의 수집, 조사나 연구를 위한 사전적 역할만을 요구하고 있어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으로 요청되지 못하는 경향이 크다.
- 문화정보의 분절화된 관리 문제와 통합 플랫폼 부재
 - 공공정보화가 하나의 사업 단위가 됨으로 인해 주요한 사업으로 놓고 그 수행체계를 만들고 이후 계속 업데이트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데이터 생산자는 데이터 수요자의 수요와 별개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정보생산자만 정보소비자가 되는 경우가 많음
 - 생산된 정보가 있어도 이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찾기 어려움
 - 인천문화재단 연감이나 인천 문화예술연감의 경우 문화예술위원회와 동일한 수준의 양질의 데이터를 매년 제공하고 있으나 단순히 기록물로 남게 되는 자료가 되어버림
 - 이미 있는 정보를 올릴 시스템이 부재하고 지자체끼리의 정보교류, 장르별 현황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부재
 - 지역기반 문화정보 관리체계의 부재
 - 인천시 문화정보 및 통계 지표 및 조사기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단위 정보로 수집되어 이를 활용하고 있어 인천 각 기관과 정책 단위 별 개별 기준의 정보의 중복생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현재 한국근대문학 정보가 수집되어 DB화되어 있고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인천근대미술 정보 수집 사업은 가능하나 이 정보를 어디에

올릴 것인가에 대한 것이 명확치 않고 이에 따라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 발생

- 지역기반 문화정보를 활용한 2차 활용 시스템 미약
 - 코로나 등으로 인해 비대면 예약시스템을 통해 정보수집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 수집의 새로운 루트와 가능성이 확대
 - 기초문화재단의 경우 왜 정보를 수집하는가에 대한 기획이나 설계 없이 중구난방의 자료수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담당자가 입력해야 하는 아이큐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정보가 양과 질의 양측면에서 비균질적이고 편차가 커지고 있음

② 인천문화정보화 정책 방향 수립의 선결과제

- 지역 문화정보화의 대상과 카테고리 구축 필요
 - 문화정보화의 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민간 활동의 정보의 수집 정도는 어떤 정도여야 하는가?
 - 문화정보화에 대한 개념의 모호함과 혼재로 인해 문화정보화가 단순히 홍보나 마케팅용 자료에 그치지 않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문화정보화 및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관한 정책을 마련 필요

※ 정보의 범주화와 역할에 대한 분류 체계 마련 필요

- 문화정보에 대한 정책적 대응력 필요
 - 단순한 정보 수집 및 저장이 아닌 정보를 선별하고 맥락을 가지고 제공하는 “에디터”의 역할이 필요
 - 현재 정책적 활용성을 높이는 기획, 연계망이 부재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위한 시스템이 아닌 어떻게 연결망을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가 깊이 연구되어야 함
 - 기초설계에서부터 확장성이 있고 연동성, 호환이 가능한 정보의 저

장소를 만드는 것이 선결과제

- 문화정보에 대한 지속 관리 시스템 필요
 - 대도시의 정보가 변화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보를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지속적 관리가 필요
 - 적절한 정보 가공과 지속적 업데이트가 병행되어야 함
 - 활용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기초자료(raw data)의 생성, 축적, 관리를 용이할 수 있도록 기준마련이 필요

- 수요자(시민) 관점의 정보제공 플랫폼 필요
 - 시민에게 공개되는 정보페이지, 앱 형태에는 정보를 시각화하기 위한 디자이너 인력의 비중과 퀄리티가 높아져야 함
 - 중앙 부처, 타 지자체, 지역 내 다른 기관에서 생성되고 있는 유사 정보들을 연계하여 제공되어야 함

- 도시 정보와의 통합성 필요
 - 정보축적의 목적이 명확해야 하는데 방대한 양으로 인해 활용도가 높은 사용자의 정보가 우선이나 현재 보이지 않더라도 필수적으로 누적되는 정보가 우선이나에 대한 선택이 있어야 한다.
 - 문화정보는 결국 도시정보와 바인딩되어야 하며 각종 운영위원회, 정보기획단, 지리정보, 인천시 정보, 인천연구원, 문화재단의 정보교류 구축이 필요

- ③ 인천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 선결과제
 - 역할과 근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
 -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의 역할과 근거에 집중해야 하며 문화정보화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다른 모든 문화관련 사업의 필수요건으

- 로 문화정보가 필요함을 인식되어야 함
- 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의 생성과 관리, 활용에 관한 역할에 대한 기획과 정보 제공, 사업에 관한 내용을 아우르는 정책 제시가 필요
- 정보화 사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에 대한 계획 필요
 - 인력구축과 사업비가 모두 지속적으로 필요
 - 인천연구원에 도시정보센터의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형적으로 보기보다 큰 투자가 이루어졌음(6~7년간 연간 10억 정도 소요)
 - 운영 예산확보의 문제도 큰데 현재 인천연구원 도시정보센터의 조직인력은 5명(문화부분 1명)
 - 시계열, 공간계열의 연동되는 보이지 않는 정보를 가공하는 정보처리 인력이 3~4명 이상 소요됨
 - 투자의 지속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보를 누적하고 조직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정보화 사업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음
-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실효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과의 즉각적인 연동 필요
 - 빠른 시일 내에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이 가동되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
 - 예를 들어 문화재 등록 후 활용하는 것이나 인천시 내의 문화예술인통계를 예술인복지재단이나 각 지자체와 연계하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함
 - 인천시가 업데이트 하는 정보에 대한 실시간 연동하는 등의 문화정보화 활용에 대한 선제적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광역차원에서의 협력 체계 구축 필요
 - 인천시, 연구원, 인천문화재단이 문화정보에 대하여 밀접하게 협력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

- 연구기관과 문화재단의 운영방식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문화관련기관에서 정보 사업을 주 사업으로 가져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명확한 정보전담기관으로서의 목표와 위상을 제시해야 함
-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이 문화재단의 홍보적 기능이나 정보의 소비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성 있는 정보 생성과 관리에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함
- 현재 유사기관과 같이 관성적으로 운영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재단의 정보와 연구원의 정보의 교류 및 공유, 시의 적절한 정보수집 및 제공이 이루어 질 수 있게 시스템을 설립 이전부터 기획 구축해야 함

④ 지역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의 역할

○ 문화정보의 공공성 및 편의성 강화

- 정보의 공개성을 통한 가공과 재구성이 활발해짐으로 인해 정보의 공공성이 높아지도록 해야 함
- 문화 정보의 리스트업, 각 정보의 우선순위의 선택, 시계열 그래프가 자동 생성되어 정보의 시간적 유의성을 제공하는 것,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의 생성되도록 하는 것이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의 역할

○ 문화정보소통의 허브

- 인천문화재단의 정보와 인천연구원의 정보의 교류와 공유, 인천시의 정보, 각 자치구의 정보, 기초문화재단의 정보를 일관되게 수집해야함
- 데이터 생산이 한 곳에 국한될 때의 한계점이 존재하고 생성되는 정보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문화재단임

○ 지역 문화정책 생산의 근간

- 문화정책사업의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쉬워져 문화정책사업의 설득력이 높아짐
- 특히 코로나 이후 예술인의 등록이 급속히 이루어져 정책대상자의 선정이 용이해 진다든지 하는 효과가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자체적인 데이터 생산능력이 없으면 정책적 대응을 하는데 있어 기준이 미약해짐

○ 지역의 변동과 특성에 대응력 강화

- 대도시의 정보가 변화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보를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반드시 인천 지역의 지역적 특수성과 현실성이 반영된 문화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함

○ 온라인 문화소비의 플랫폼 기능

- 이음카드(지역화폐)과의 연동을 통해 아이큐 활용
- 문화 소비자들의 일상적인 플랫폼으로서 활용도가 높아져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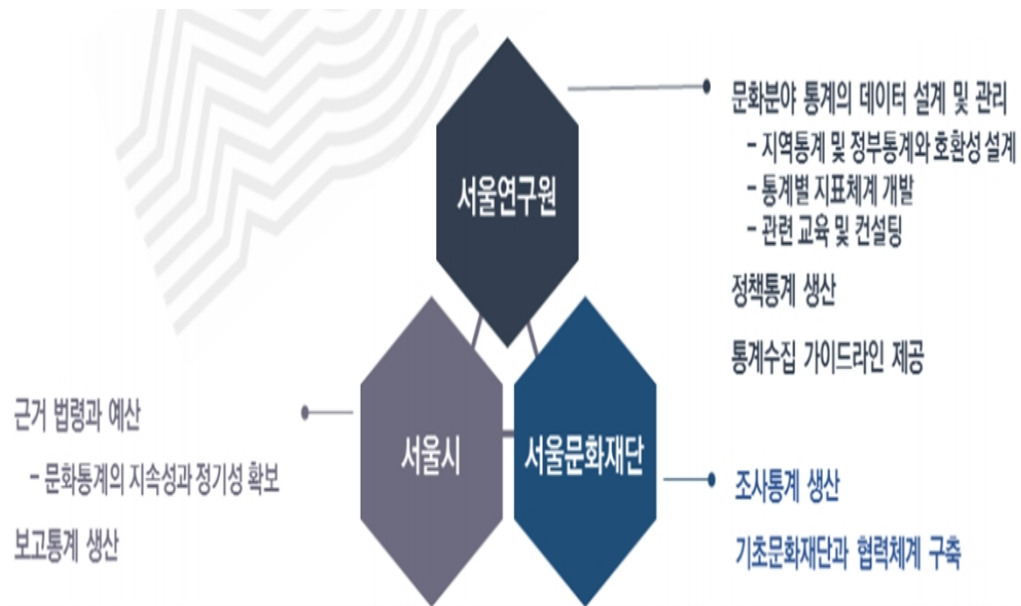
⑤ 인천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 요건

○ 문화재단이 문화와 관련된 정보를 전략적으로 다루기 위해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필요가 있음

- 지역 내에서 문화정책연구의 1차적인 역할은 인천연구원이 수행하고 있으나 문화재단이 문화정책 전반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정보처리에 있어서 안정성 확보를 통해 문화정보의 공공성이 높아질 수 있음
- 문화관련 정보는 문화재단과 연관된 인천의 문화예술인력, 문화예술

- 단체, 생활문화 참여자,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시민 모두의 활용도를 재고할 수 있음
- 인천문화재단의 문화정책 허브로서의 기능 강화
 - 특히 최근 인천 내부에 기초단위 문화재단이 설립되는 가운데 광역 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과의 관계 속에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로 정보화 전담 기관으로서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중앙/광역/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통계와 정보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황파악이나 성과측정이라는 목적에 따라 각기 생산하고 있음
 - ※ 중앙정부에서는 <문예연감>,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향수 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공연예술실태조사>가,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서울문화지표>, <세계도시문화리포트> 등이 생산됨
 - 지역관점에서 정보를 해석하여 중복조사와 사각지대의 발생을 막고 시의적, 지역적 적절성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이 필요
 - 문화정책영역의 변화
 - 문화정책의 영역이 과거 시설관리, 공연, 전시와 같은 결과물이 있는 문화예술 활동 성과로 드러났다면, 현재에는 문화다양성, 문화민주주의, 지역문화 등 다양한 영역으로 변화하면서 기존의 양적 문화정보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질적 문화정보를 필요로 하게 됨
 - 특히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과 문화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지역의 문화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 광역 단위 문화정보화 흐름 대두
 - 서울연구원은 2019년 ‘서울시 문화분야 통계구축 기본방향과 과제’에서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새로이 생산해야 할 문화정보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서울문화생태지표조사>, <문화다양성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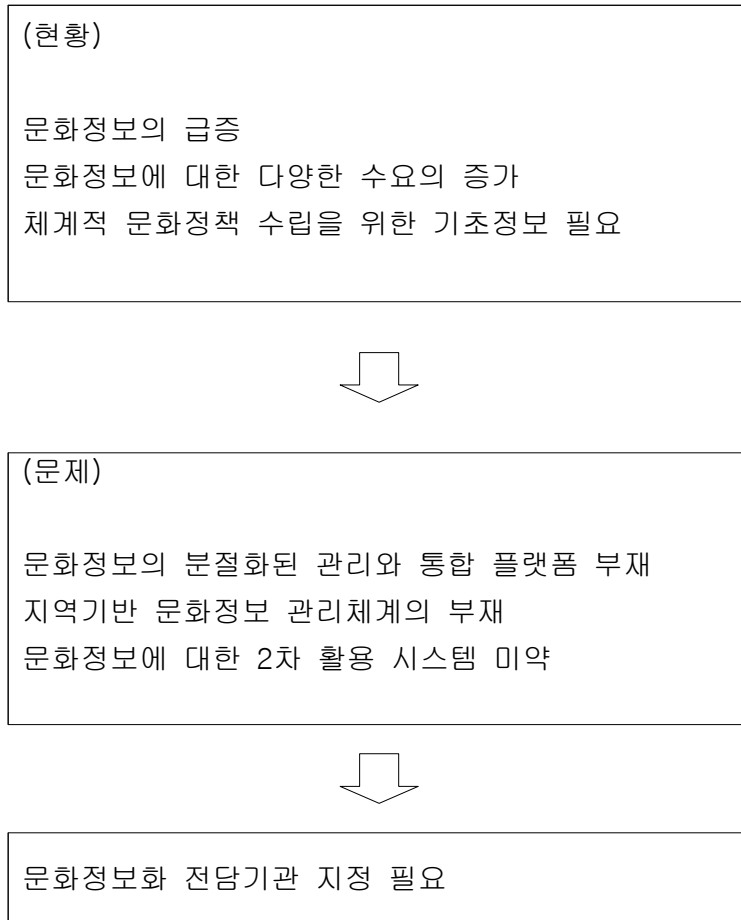
<서울시민문화활동조사>, <서울예술인활동조사>, <서울문화예술교육통계>, <서울생활문화활동통계>를 필요한 문화정보로 파악하고 가칭 서울문화통계센터의 설립과 현행 서울연구원, 서울시, 서울문화재단의 협력 체제를 제시



<그림 3> 서울시 문화정보화 협력 체계

□ 전문가 자문회의 소결

- 자문의견을 종합하면 문화정보화 전담기구의 필요성은 분명함



-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서 현재의 인천문화재단은 분명한 강점과 약점이 병존하고 있으나 해결 가능한 약점으로 문화정보화 정책방향에 대한 비전 제시와 자원 투자계획이 수립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망이 구축되는 것을 전제로 지정기관으로서의 적정성이 있음

(과제)

지역문화정보화의 대상과 카테고리를 구체화
문화정보에 대한 정책 대응력 필요
문화정보에 대한 지속 관리 시스템 필요
수요자 관점 정보제공 플랫폼 필요
도시정보와의 통합성 필요



(인천문화재단의 강점)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 및 정보화 경험
문화정책기능을 보유
안정적 사업관리 능력 보유
수요자(문화향유자) 관점 사업능력 보유

(인천문화재단의 약점)

지원사업 중심의 사업구조
체계화된 정보 가공 능력의 부재
해당 사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계획 부재
(현재)



(소결)

문화정보정책 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비전 제시 필요
지속력 있는 자원 투자 계획 필요
인천시-인천연구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모델 제시 필요

1.2 관계자 의견 조사

(1) 관계자 의견 조사의 기본 정보

- 조사 목적 : 인천광역시 문화정보화 정책과 관련한 지역문화계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추진 과제 도출에 반영
- 조사 기간 : 2020년 11월 20-12월 10일
- 조사 방법 : 질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 조사 규모 : 지역 문화예술계 관계자 30명
- 조사 내용
 - 인천시 기존 정보화 관련 사업의 성과와 한계
 - 주요 성과
 - 기존 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
 -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요구되는 역할
 - 주요 역할
 - 타 기관과의 역할 분담
 - 문화정보화 사업 및 추진 과제
 - 문화정보화에 가장 크게 기대하는 점
 -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 문화정보 수집 방안
 - 문화정보 활용 방안

- 유관 기관 협력 방안

(2) 항목별 조사 결과

① 인천시 기존 정보화 관련 사업의 성과와 한계

□ 인천문화재단 : 인천문화큐 아이큐(<http://iq.ifac.or.kr/>)

- 인천시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 관련 사업의 성과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 이 인천문화재단의 아이큐에 관해 언급하였음.
- 공통적으로 일반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정보 제공 기능으로 의미가 있으며, 문화행사, 문화자원, 문화장소로 구분하여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점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되어 이용편의성이 높다는 점을 장점으로 평가하였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문화행사 : 기간별·지역별·분야별·테마별 문화행사를 검색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단체가 직접 행사정보를 탑재 및 업데이트 할 수 있음
 - 문화장소 : 공연시설·전시시설 등 지역문화시설의 대관 정보가 있음
 - 문화자원 : 지역축제, 문화재, 문화자료,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등록됨
- 그러나 현재 이러한 정보 제공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알려져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한계로 지적함
- 시민들의 활용이 낮기 때문에 예술단체에서 행사소식을 올릴 수 있

음에도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으며 구체적으로 지적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문화행사: 오픈 플랫폼으로 예술단체나 행사주최특이 자율적으로 소식을 올리는 방식이다 보니 올라와 있는 행사정보가 미흡하고 그마저도 일부 지역 소식에 편중
 - 문화장소: 페이지 내에서 대관신청을 할 수 없음
 - 문화자원: 기초자치단체별 문화자원이나 문화재가 다 등록되어 있지 않음
 - 문화예술관련 자료도 문화재단 연감 등이 특정 시점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등 올라와 있는 자료들이 대부분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인력과 관련한 정보의 경우도 강의 등을 목적으로 문화예술인을 섭외하고 싶어도 연결점을 찾을 수 없는 등 활용성이 낮음
- 전반적으로 인천문화재단이 아이큐를 운영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하고자 한 점은 긍정적이나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도를 높이지 못한 점이 현재의 한계로 지적되었음

□ 인천연구원 : 도시정보센터(인천연구원 아카이브 DA:IN)

- 일부에서 언급하였으나 도시정보센터의 역할을 인천의 특성화 된 문화정보화 기능으로 매우 중요한 성과로 평가
- 도시정보센터는 도시·지역개발, 도로·교통·물류, 환경·자연·기후, 방재·안전, 인문·문화 등 도시와 관련한 전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필요 자료 요청 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가공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신뢰성 높은 전문적인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한다는 점을 의미 있게 보고 있음

- 그러나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정보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었으며, 도시데이터 전 분야의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주로 학술적 연구를 위한 자료가 대부분이며 연구원 내부망으로만 접속이 가능하여 외부에서의 활용이나 일반시민의 일상적 접근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

□ 기타

- 역시 일부에서 언급되었으나 인천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인천문화예술연감>은 2005년부터 해마다 지속적으로 조사·발간되고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도록 제공되어 지역문화예술 연구자나 예술가들에게 활용성이 높은 자료로 평가
- 그러나 문화예술연감에서 수집하는 자료의 범주가 문화예술 장르 중심<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
- 이외에도 인천문화재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발간자료나 정책동향 분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있었음
- 인천문화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와 관련해서는 일부 카테고리의 정보는 특정 시점에 멈춰 지속적인 정보의 업데이트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 점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신뢰도를 낮추고 있다는 의견 제기됨
- 이 외 인천연구원, 인천문화재단 외 박물관 등 각 문화시설에서 다

양한 아카이빙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 요소도 있으나 대부분의 조사가 한정된 예산으로 단순한 기록 수준에 머무르는 점을 현재 추진되는 사업의 한계로 지적

- 인천문화재단이 그 동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한국근대문학과 인천문화유산센터 사업 추진 성과를 고려할 때 향후 문화 정보화 전담기관의 역할 수행에 적합하다는 의견도 나왔음

②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요구되는 역할

□ 주요 역할

- 정보화 전담 기관의 주요 역할과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다양한 지역 문화 자료의 수집 및 제공'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역 문화관련 실태 또는 현황 정보의 수집
 - 분류 체계 연구를 통한 체계적 자료 수집
 - 수집된 자료 및 통계 등에 대한 분석 자료 제공
 -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대상 정보제공 서비스
 -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운영
 - 인천 문화정보 관련 기관·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 모든 의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한 중요 역할은 시민들이 활용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었음
- 다수의 의견이 예술중심의 정보에서 보다 범위를 확대하여 '인천'이라는 지역의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하는 것도 주목할 지점

- 수집하는 자료의 다양성을 중시하면서 분류 체계에 따라 보다 전문화된 자료의 축적도 전담기관의 중요한 역할로 강조하였음

□ 타 기관과의 역할 분담

- 기존 문화 시설과 가장 차별화되는 전담 기관의 역할로는 '정보 수집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과 '주기적인 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전담기구는 통합적인 정보 수집 및 제공 서비스를 해야 하므로 직접적인 정보 수집 활동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다양한 문화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 및 단체들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점검하고, 분석하여 제공하는 차별화 된 역할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제안한 구체적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문화생활 정보: '인천문화큐 아이큐'의 경우, 문화재단 등 공공기관 및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전시, 행사 관련 문화정보와 지역 내 문화공간 및 시설 정보, 예술인 및 단체 정보와 같은 문화생활 정보를 주로 게시함
 - 해당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해야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관내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과 협력하여 문화생활 정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문화지식 자료: 문화통계 및 연구보고서 등은 인천연구원 도시정보센터와 협력하여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련 연구기관이나 대학 부설 연구소와도 협력이 필요
 - 문화산업 관련 데이터의 경우에는 관내 문화산업 기업이나 중간지원기관(인천테크노파크 등)과의 협력이 요구됨
 - 그 외 기초문화재단이 보유한 기초지자체별 문화정보와 군·구 문화

담당부서의 문화데이터도 입수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의 문화정보화 기관 및 관련 기관(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과의 연계협력도 요구됨

-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은 홈페이지는 유관 기관들의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타 기관의 정보를 한 눈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그간 산발적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아카이빙이나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합하여 일반시민의 이용을 제한하는 문제를 제거하고 개선하여 일반 시민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그간에 축적된 개별 기관의 정보나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역할이 강조

③ 문화정보화 사업 및 추진 과제

□ 문화정보화에 가장 크게 기대하는 점

- 문화정보화에 가장 크게 기대하는 점으로는 '정보 접근성의 확대'와 '이용의 수월성'에 관한 의견이 많았음
-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보 수집 및 제공으로 누구나 쉽게 원하는 문화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정보 제공의 일원화로 이용 편의성 제고
- 소규모 유사 중복 사업이 규모화 되어, 보다 실효성 있는 문화정보화 사업 추진
- 문화예술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면 시민과 예술가의 문화정책 참여가 쉬워질 것
- 정보의 집적화로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도 높아질 것임
- 4년 단위의 문화지표조사 데이터 외에도 매해, 분기별, 월별 문화정

보, 시민이나 예술가 설문조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면 인천의 문화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문화정보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입수·가공하여 제공하는 역할도 필요

□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 인천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이 제공할 정보 목록을 구성하고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는 사업과 정보 제공 서비스를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언급되었으며 관련한 세부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기초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는 유관 기관과 정보 제공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 중요함 과제
- 각 협력 기관 전담인력 지정하여 주기적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공공기관의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쉽게 조사, 수집, 축적이 용이하나 민간 영역에서 정보는 자율적으로 등록하는 방식만으로는 쉽게 업데이트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인천문화예술연감의 경우도 인천문화재단의 지원 사업 중심으로 정보가 축적되는 경우가 많고 공공기간 이외에 데이터 수집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실재 민간영역의 활동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함

□ 문화정보 수집 방안

- 문화정보 수집 방안으로는 참여형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지지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음

- 문화생활 자료: 현재 '인천문화큐 아이큐'가 제공하는 문화생활 관련 정보는 참여형으로 관계기관이나 단체가 직접 게시하는 것이 적절
- 문화지식 자료: 자료의 출처, 신뢰성이 중요하며 정확한 데이터를 입수하여 제공해야만 활용의 가치가 있으므로, 전담기관의 전문인력이 공신력 있는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함
- 또한 정보화전담기관의 지정을 계기로 한시적으로라도 조사원을 고용하여 전수조사를 목적으로 한 실태조사로 수집 자료의 양을 확대하고 실재 현장을 조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 문화정보 활용 방안

- 문화정보의 활용과 관련한 의견으로는 다수가 정보의 분석 및 가독성을 높인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안하였고 이를 위해 일반 시민을 위한 정보와 전문가를 위한 정보의 구분 활용에 관한 의견도 제시됨
- 아카이빙 시작부터 하나의 자료에 대해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식(원전 중심)과 대중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식(현대어 개고+해설)이 함께 고려되어 축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생활 자료 : 인천시, 문화시설 및 공공기관에 '인천문화큐 아이큐'를 링크하도록 하여 문화와 관련한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접근도와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문화지식 자료: 관내 연구기관, 문화산업 기관, 공공 문화기반시설, 관내 학교 등에 새로 입수된 자료와 관련한 브리프(brief) 자료를 메일링으로 서비스하여 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지역의 현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인포그래픽 정기적 발간
- 모바일 등에서 쉽게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 운영

- 문화행사 통합 예약 및 예매 서비스의 확대 운영도 제안되었음.
 - 인천광역시의 온라인통합 예약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 구축 필요
(<https://www.incheon.go.kr/res/RE010101>)
 - 공연, 전시, 축제 등의 예약 공유 서비스를 인천 차원에서 구축(통합 전산망)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

□ 유관 기관 협력 방안

- 유관 기관과 자료제공 및 협조와 관련한 협약을 맺고, 실무적 결정권을 갖는 구성원들의 정례적 업무 협의회 등을 통해 자료의 지속적 입수와 업데이트, 홍보, 효율적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정보 수집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역할 부여 필요
 - 민간의 정보를 효과적이며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정보수집 사업을 민간이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유사 정보 제공 플랫폼 또는 인천시민들의 사용이 광범위한 플랫폼과의 연동 고려
 -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인천지역문화예술 교육네트워크 홈페이지(<https://www.iecs.go.kr/artnet/mainPage.do>) 신규 오픈(2020년10월)
 - 인천문화예술자원 지도, 문화예술 체험공간 정보 등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러한 플랫폼과의 연동 방안 강구 필요

□ 기타

- 기타 의견으로는 정보화에 관한 인식 확산 및 관련 논의의 장이 마련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음
 - 이는 매우 현실적인 제안으로 실제 본 조사를 의뢰받은 전문가 중

일부는 문화정보화 관련한 인천시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줄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으며, 차후 대면 조사가 이루어져서 내용을 확인하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면 보다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

(3) 종합 정리 및 소결

- 우선, 인천시 기존 정보화 관련 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인천연구원의 도시정보센터는 학술적이며 전문적 영역의 결과를 보여주는 활동을 해 왔으며 인천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계와 시민을 위한 정보 제공 서비스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춰 왔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인천연구원의 도시정보센터 사업은 접근성에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인천문화재단의 아이큐는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질이 기대에 못 미치며 활용성이 다소 낮다는 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으며, 그 외 발간 자료나 조사 활동도 다소 체계성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시민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다수가 지적
- 이에 향후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이 지정된다면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각각의 필요에 의해 실행되던 정보 수집 및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합하여 누구나 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짐
- 문화정보화 사업 및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우선순위로 추진 할 사업과 정보 수집 방식, 활용 방안 에 대한 의견을 비롯하여 유관 기관 간 협력에 대한 아이디어 등이 제시되었음.

- 문화정보화를 통해 가장 크게 기대하는 효과는 시민의 정보 접근성의 확대와 이용편의성 제고이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강조된 것은 수집 정보의 분류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이 직접 수집하거나 제공 할 정보와, 타 기관과 협력할 정보 등도 구분함으로써 기관 간에 역할 분담과 보다 효율적이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문화정보 수집 방법과 관련해서는 오픈형 플랫폼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되, 전문적인 정보나 현장 조사가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민간의 참여를 통해 축적하는 방식을 다수가 제안하였음
- 축적된 문화정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 가공하여 적극적으로 현장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관련 기관 뿐 아니라 민간 단체와의 적극적 협력도 정보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되었음
- 이러한 민관의 협력 체계 구축은 정보 수집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수집된 정보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여 보다 많은 이들이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고려됨
- 정보화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의견 개진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임

-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인천시 문화정보 전담기관이 추진해야 할 사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음

문화관계자 의견 조사의 소결

< 정보화 및 정보제공 통합 운영 체계 구축 >

-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간소화
- 정보 제공 플랫폼 운영
- 유관 기관 협의체 운영

< 분류 체계 연구 및 체계적인 자료 수집 >

- 정보입력체계 구축 및 매뉴얼 제작, 교육 등
- 인천문화예술연감, 문화지표, 사회지표, 각 지자체 통계자료 등의 체계화
-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한 효과적 정보 수집(각 기관 문화정보화 담당자 지정)
- 자료입력 체계화, 구성, 필터링

< 수집된 자료를 누구나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공유 >

- 수집 된 정보의 분석 및 정보 제공
- 홍보와 정보 활용 확산 계획 수립
- 인천e음 어플리케이션 등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과 연동
- 신뢰성, 일관성 있는 통계 자료의 제공

2. 이슈 분석과 정책 방향

2.1 문화정보화 전담 기관 지정의 근거

□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의 필요성

- 정부와 인천시의 정책 방향
 - 정부의 상위계획인 “문화비전2030”과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는 모두 지역에서의 문화정보화 정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관 지정 및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음
 - 인천시가 정부에 제출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문화예술진흥조례에서는 모두 지역의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을 공식화하고 있음
 - 상위 계획과 지역에서의 계획에서 모두 지역의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지정과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기관 지정이 가까운 시일 안에 이루어져야 함

- 지역의 문화정보 현황에 따른 필요성
 - 현재 문화정보의 양적 급증, 문화정보에 대한 수요 다양성의 증가, 체계적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필요가 요구되고 있음
 - 문화정보에 대한 분절화된 관리를 통합하고 지역기반 문화정보를 축적·관리하고 2차적 활용을 활성화할 전담기관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통합적 문화정보 관리체계의 필요성
 - 현재 인천문화재단의 홈페이지, 아이큐 등 자체적 문화정보화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타 기관과의 연계미약, 전문적 관리시스템의 부재, 확장성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 활용도에서 한계가 있음

- 인천연구원의 경우도 도시정보센터를 통해 자체적으로 전문화된 정보를 생산 제공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시민의 문화정보 접근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의 문화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을 이끌어 나갈 문화전담기관의 지정이 시급

□ 인천문화재단의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의 근거

-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서 인천문화재단의 강점과 필요성
 - 인천문화재단은 지난 15년간 지역의 문화정책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재단의 해독력에 강점이 있고 문화정보 수집에 있어서도 안정성이 높음
 - 홈페이지 운영, 아이큐 운영, <인천문화예술연감> 발행 등 선행사업 경험 풍부
 - 인천문화재단과 연관된 인천의 문화예술인력, 문화예술단체, 생활문화 참여자,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시민 모두의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체계적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활용도를 그 어느 기관보다 높일 수 있음
 - 최근 인천 기초지자체(자치구 단위) 문화재단이 설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과의 관계 속에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로 정보화 전담 기관으로서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문화정책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며 지역의 문화정책을 설계하는 정책허브로서 문화재단의 기능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음
-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서 인천문화재단의 과제
 - 문화정보화 정책에 대한 비전 제시를 통한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
 - 문화정보화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속적 투자 계획 필요

- 전담기관 지정의 즉각적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 개발 및 빠른 연동
- 광역차원에서의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2.2 지역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역할과 위상

□ 지역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의 역할

- '다양한 지역 문화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중심으로 통합적 관리와 서비스 제공
 - 지역 문화관련 실태 또는 현황 정보의 수집
 - 분류 체계 연구를 통한 체계적 자료 수집
 - 수집 자료 및 통계 등에 대한 분석 자료 제공
 -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대상 정보제공 서비스
 -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운영
 - 인천 문화정보 관련 기관·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 시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의 분석 및 시각화
- 예술 정보 중심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인천'의 광범위한 도시문화정보를 수집하고 기록
-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 변동에 대응하는 지역에서의 문화정보화 정책의 발신지로서의 역할

□ 지역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의 위상

- 산발적으로 제공되던 문화정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적 허브기관으로서의 위상
 - 이를 위해 그간에 축적된 개별 기관의 정보나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

- 직접적인 정보 수집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 및 단체들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점검하고, 분석하여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정보관리 기구의 위상이 필요
 - 관내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과 협력하여 문화생활 정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리 및 검증시스템을 갖춰야 함

- 문화정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로서의 위상 필요
 - 인천연구원 도시정보센터를 포함하여 지역의 관련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소, 관내 문화산업 기업, 중간지원조직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성이 필요
 - 향후 인천 내 기초문화재단이 보유한 기초지자체별 문화정보와 군·구 문화담당부서의 문화데이터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분권형 거버넌스도 필요
 - 중앙정부의 문화정보화 기관 및 관련 기관(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과의 파트너십도 필요

2.3 지역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의 주요 사업 방향

- 정보화 및 정보제공 통합 운영 체계 구축
 -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현재 각 기관에 산재하는 문화정보를 통합하여 관리
 -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의 간소화
 - 사용자 관점에서의 편의성이 강조되는 인터페이스 개선으로 활용도 제고
 - 정보제공 플랫폼 운영
 - 사용자의 니즈가 반영된 정보의 재가공
 - 정보의 단순한 나열이 아닌 직관적 접근이 가능한 운영체계 개선
 - 유관 기관 협의체 구성
 - 인천시-인천연구원 도시정보센터 등과의 문화정보화 정책협의체 구성
 - 관내 공공문화시설, 기초문화재단 등이 포함된 바텀업의 문화정보화 협의구조 구성
- 분류 체계 연구 및 체계적인 자료 수집
 - 정보입력체계 구축 및 매뉴얼 제작, 교육 등
 - 문화정보의 입력체계를 체계화하며 각 단위에서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 제작
 - 문화기관, 시설에 대한 정기적 문화정보 취급에 대한 교육 실시

- 인천문화예술연감, 문화지표, 사회지표, 각 지자체 통계자료 등의 체계화
 -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지역 문화지표 개발을 통해 문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에 따른 문화정보 카테고리의 개발

-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한 효과적 정보 수집(각 기관 문화정보화 담당자 지정)
 - 문화정보화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 신뢰성, 일관성 있는 통계 자료의 제공

- 문화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 수집된 정보의 분석 및 정보 제공
 - 문화정보에 대하여 직관적 키워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문화정보에 대한 분석 자료의 꾸준한 제공으로 지역 문화기획과 예술경영에 대한 서비스 제공

- 홍보와 정보 활용 확산 계획 수립
 - 문화정보플랫폼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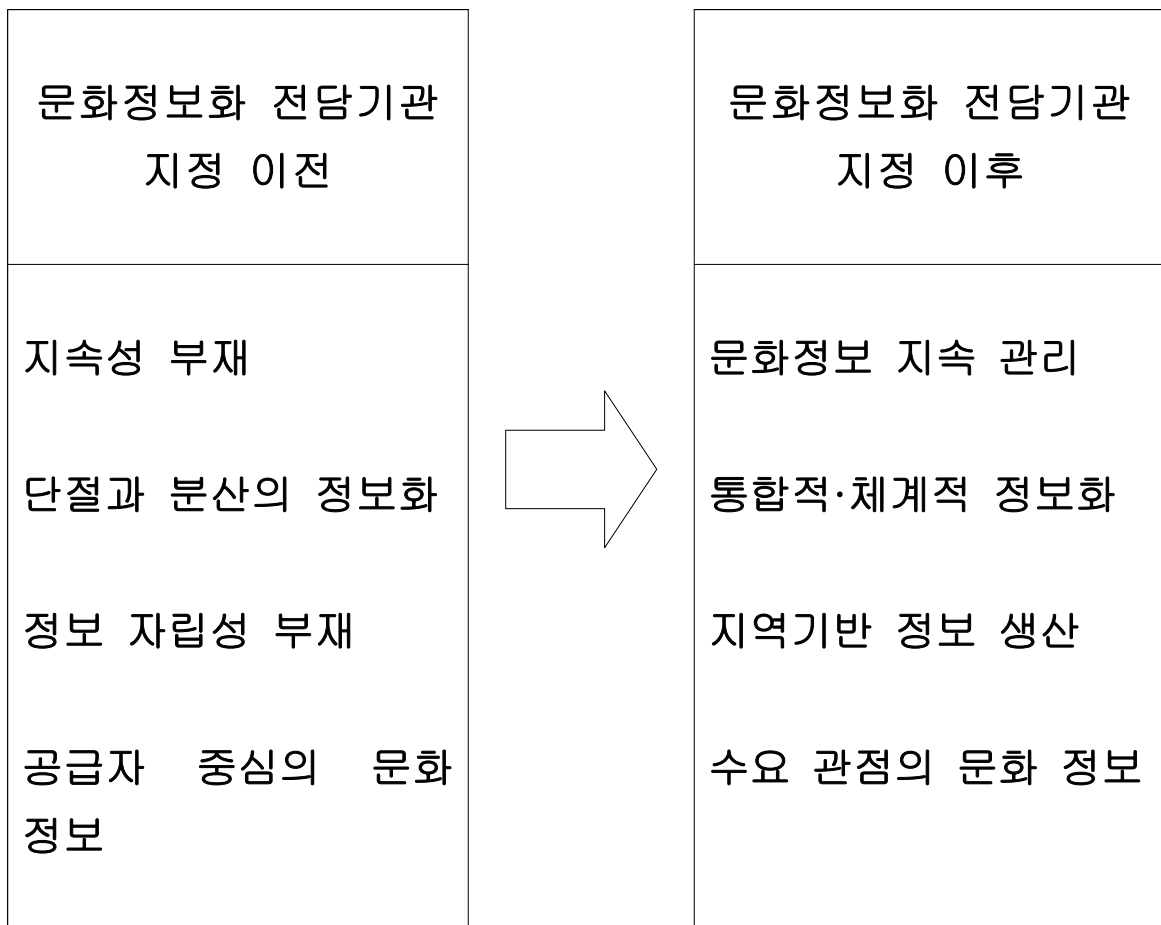
-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과 연동
 - 인천e음 어플리케이션 등 기존의 활용도 높은 어플리케이션과 연동
 - 예약, 결제, 구매 등 다양한 문화적 소비가 보다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제 4 장
추진체계 및
당면 과제

제 4 장 추진 체계 및 당면 과제

1. 추진 체계

1.1 문화정보화 정책 방향 전환



1.2 전담기관 지정 추진 프로세스

(1) 지역 문화정보화 사업 통합 방안 설계

- 지역 내 각 기관별 문화정보화 사업 리스트 작성
- 기존 문화정보화 사업의 프로세스 분석
- 문화정보 사용자 수요 조사(관계자 및 시민 의견 조사)
- 상위 정책단위와 광역 단위 문화정보화 통합 사례 조사

(2) 문화정보 활용 방식의 유형화

- 현재 각 기관의 문화정보화 사업의 활용도 조사
- 활용 유형에 따른 분류 및 구조화

(3) 문화정보 활용도 제고 방안 제시

- 문화정보 활용에 대한 유형별 실태조사
- 통합 서비스를 통한 활용도 제고 방안 제시
- 대관, 예약, 결제 등 2차적 활용 사업의 모델 제시

(4) 문화정보화 추진 체계 구체화

- 각 기관·사업별 문화정보화 정책 지향의 분석
-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한 협력체계 구축 방향 설계
- 디지털 거버넌스를 통한 기관별 활성화의 방향 제시

2. 당면 과제

2.1 문화정보화 전담 기관 지정 추진을 위한 선행 사업 실시

(1) 문화정보화 사업에 대한 지역 공감대 확산

- 문화정보화에 대한 지역 내 워킹그룹 간의 사전 조율
 - 문화정보화에 대한 효율적 추진을 논의할 수 있는 시정부-재단-공공기관-문화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문화정보화에 대한 이해 확산 및 사업 논의
 -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의 역할에 집중해야 하며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화관련 사업의 필수요건으로 문화정보화가 필수적이란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함
-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질문의 답으로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의 생성과 관리, 활용에 관한 역할에 대한 기획과 정보 제공, 사업에 관한 내용을 아우르는 정책 제시 필요
- 구체화된 문화정보화의 방향을 알릴 수 있는 공론장의 마련 및 협

의기구의 선도적 제안

- 필요에 따라서 문화정보화의 구체적 방향에서 이슈를 도출하여 공론장 운영

(2)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을 위한 예비 사업 실시

-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모델에 대한 정책 연구
 - 구체화된 사업체계와 모델을 설계·제시
- 파일럿 사업의 개발
 -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활동될 경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 개발 및 연계 필요
 - 예컨대 "지역 문화재 DB의 체계화"와 활용 방안을 연계하는 사업 개발이나 인천시 문화예술인통계를 체계화하여 예술인복지재단이나 지자체 복지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 등을 꼽을 수 있음

2.2 문화정보화 추진 준비 조직 운영

(1) 인천문화재단 내 문화정보화 사업을 위한 TF 구성

- 경영본부 내 전략기획팀과 대표이사 산하 정책협력실을 중심으로 TF구성
 - 재단 내부 역량 확인 및 전담기관 설립 방향 논의
 - 각 부서에서 1인 이상이 참여하는 TF 운영으로 일차적으로 재단 사업의 정보화의 과제를 도출함
- 개방적 TF운영을 통한 외부 관련기관과의 정책 협의
 - 인천시, 인천연구원 등 외부 정책기관과의 정책 협의

- 지역 공공문화시설, 기초문화재단과의 정책 협의
- 전담기관 지정을 포함한 통합적 문화정보화 사업 추진 일정 조율

(2) 문화정보화 전담조직 설계 방향

○ 문화정보화 전담조직의 업무 영역

- 주요한 업무의 영역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의 주요 사업예시를 참조하여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함

업무영역	주요 내용
문화정보화 정책기획	문화정보화 사업 기획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정보	문화시설, 생활문화시설 정보 인천광역시 및 공립문화시설에서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 (행사, 축제, 교육 등)
문화공간 정보	문화도시, 문화특화지역,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 등
행정/공공 사업 정보	문화관련 법·제도(자치법규) 문화관련 보조사업 정보
주요 지표 및 통계	주요지표, 현황 문화관련 수요/공급 데이터, 빅데이터
인력 및 일자리 정보	전문예술인, 관련 기관의 인력양성사업 배출인력정보 문화분야 구직자 개인정보 문화부문 공공/민간 일자리 정보 문화분야 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 정보

[표 7] 문화정보화 전담조직 업무영역

- 현재까지 광역은 문화정보 급증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축적, 공유, 활용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 점에서 문화정보화 전담조직은 문화정보의 설계에서부터 관리까지 전 영역을 포괄하는 전담체계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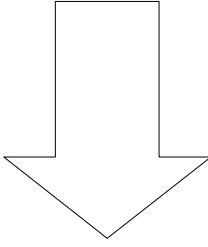
- 문화정보를 생산하는 데 아카이빙 자료, 정성 자료를 가공하고 경향성을 분석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인천 시민 전반의 문화트렌드를 읽

을 수 있어야 함 [SEP]

- 문화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시민의 문화향유 실태수준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중요함
- 이에 광역 차원에서는 가이드라인 제시 및 데이터 축적과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문화정보·통계 관련 데이터 설계에서부터 데이터 큐레이션까지 문화정보 전 영역을 아우르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기초 차원의 데이터 생성은 기초가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

[SEP]

- 이런 업무 내용으로 업무 관계를 계열화하면 다음과 같음

업무 영역	
① 문화정보의 설계	
② 문화정보 수집	
③ 문화정보 분석	
④ 문화정보 DB화(아카이빙)	
⑤ 문화정보 큐레이션 및 전달	

[표 8] 문화정보화 전담조직의 업무 흐름

○ 위 표의 업무 영역의 흐름에 따라 업무 분장을 해보면 다음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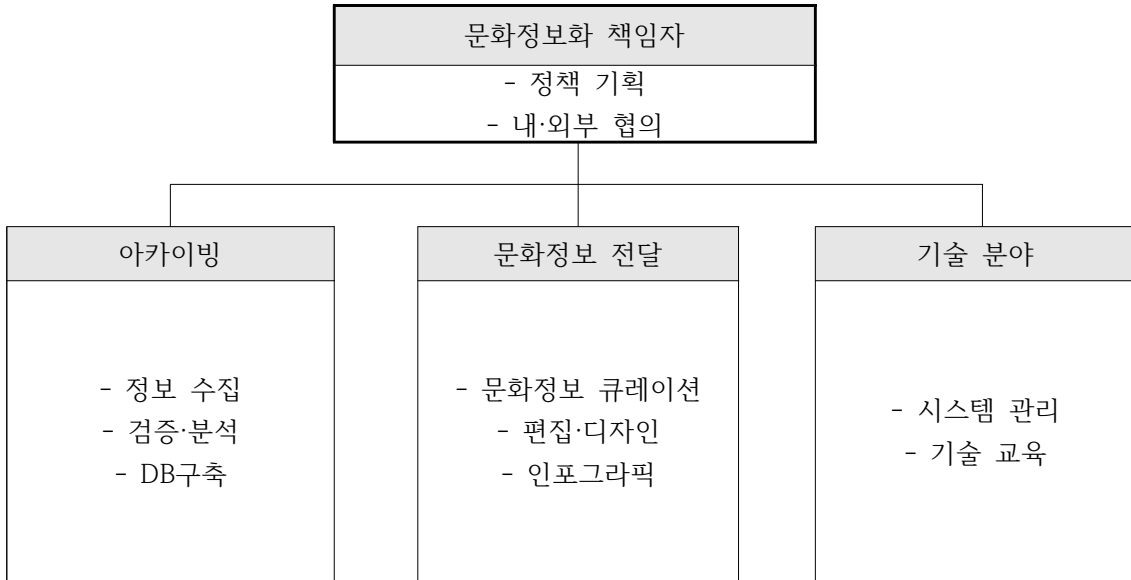
문화정보화 정책업무	문화정보 수집·분석	문화 정보 전달	기술 지원
- 정책 기획 - 내·외부 협의	- 정보 수집 - 검증·분석 - DB구축	- 문화정보 큐레이션 - 편집·디자인 - 인포그래픽	- 시스템 관리 - 기술 교육
(1~2명)	(2~3명)	(2~3명)	(2~3명)

[표 9] 문화정보화 업무 분장

- 최소한 7명에서 최대 1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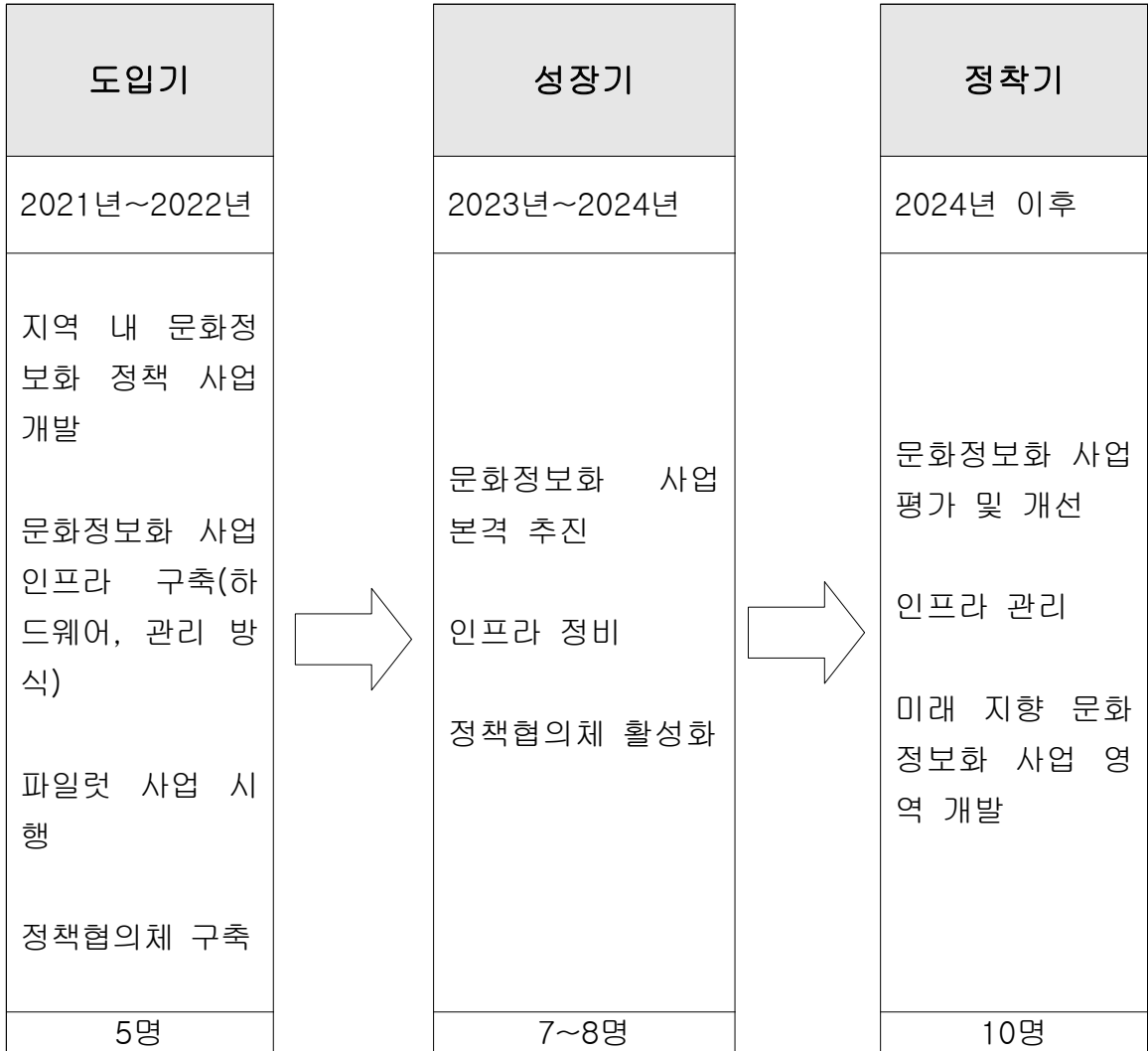
2) 실제로 조직을 구성할 경우 보다 세심한 기술인력의 투입 부분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수반되어야 함

○ 이에 따라 업무 조직도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음



[표 10] 문화정보화 사업 조직도

○ 문화정보화 전담부서의 인력·조직 구축에 대한 시기별 계획 수립



[표 11] 문화정보화 전담부서의 인력조직에 관한 시기별 계획

-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
 - 보다 구체화된 사업체계와 모델이 설계되어야 신뢰할 수 있는 예산 추계가 가능함
 - 과거 인천연구원에 도시정보센터의 구축이 이루어는 과정에서도 연간 10억 정도 소요
 - 최소인력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5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로 추정됨(정보의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시계열, 공간계열의 연동되는 보이지 않는 정보를 가공하는 정보처리 인력이 3명 이상 소요됨)

- 이후 조직을 확대하더라도 최초에 사업을 설계하고 키워나가는 정착 단계의 인력도 5인 이상은 필요함
- 정보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기술적 비용 발생의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한 정확한 비용 확인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도 구체적인 사업 모델 설계가 선행되어야 함

2.3 문화정보화 전담 기관 지정 제도 정비

(1)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 절차

○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와 시행 규칙

- 인천광역시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및 이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당 조례의 제8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각 분야의 정보화 추진을 시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분야 중 “문화” 분야가 포함되어 있음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8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 당 조례에 따라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할 경우에 시행규칙에 따른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정보화사업 계획) ① 주관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정보화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3. 현황평가를 통한 문제점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
4. 업무프로세스, 관련법령 및 규정 준수
5.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
6. 정보통신기술 및 가용자원 분석
7. 정보시스템간 연계방안 및 보안대책
8.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9. 다른 기관 또는 해외사례의 분석
10. 향후 발전방향 및 기대효과

- 여기서 문화 분야의 주관부서는 인천시 문화관광국으로 다음의 내용을 근거로 문화정보화사업 계획 및 예산 검토 요구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보화부서 및 해당사업의 실행조직(문화재단)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시행규칙에 따라 타당성이 다음과 같이 검토되어야 함

제4조(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를 위하여 정보화사업 계획 및 예산 검토 요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예산편성 전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해야 한다.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2. 정보화사업 소요예산의 적정성
3.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가능여부
4.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5. 조례 제4조에 따른 부문별 정보화 기본계획과의 연계 여부

-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 및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 ⑤ 예산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예산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우선하여 반영해야 한다.

(2) 인천광역시 문화정보화 및 전담기관 관련 자치법규 검토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의 문화정보화와 관련 내용
 - 인천시의 문화예술진흥조례에서는 문화정보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앞선 조례 검토에서 알 수 있듯 제12조 계획수립의 2항 4호의 “문화예술 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관한 사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조례 체계·구조에서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담아내기 어려운데 이는 기존의 조례가 주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하위법령의 성격으로 문예진흥법과 그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루는 구조이기 때문임

-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검토
 - 앞선 검토에서도 알 수 있듯 문화정보화 사업은 문화정책개발, 문화영향평가 등과 함께 문화기본법에 근거한 사업인데 현재 문화기본법에 따른 지자체의 하위법령체계가 뚜렷하게 잘 갖춰져 있지 않음
 - 단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의 근거를 문화기본법에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음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개인의 문화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25조(문화영향평가의 실시)

시장은 시민들의 문화권과 문화다양성을 보존·확산하기 위하여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문화영향평가계획의 수립)

시장은 예측가능하고 효과적인 문화영향평가를 위해 대상 계획·정책의 선정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7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 가운데서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1.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
2.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28조(문화영향평가의 방법)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데 적용 가능한 방법과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문화영향평가의 위탁 등)

시장은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수행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문화영향평가 결과 환류)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시행부서는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의견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재정의 지원)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문, 교육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인천의 경우는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조례>가 제정되어있으나 뚜렷한 상위법령과의 관계설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과 이를 위한 도시환경,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이념으로 삼고 있음
- 때문에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서 문화기본법 등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문화정보화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음
- 유사한 사례로 또한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별도의 조례들을 참고할 수 있음
 - 경기도, 대구, 전남, 충북 등이 문화영향평가와 관련된 별도의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런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에서는 <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를 경기도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고려사항, 결과반영, 문화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다루고 있으며 전담기관 설치에 관하여 제13조 문화영향평가센터 설치에서 다루고 있음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제13조(문화영향평가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화영향평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영향평가기관 선정 및 관리
2. 문화영향평가 방법 및 평가지표 등 연구개발
3. 문화영향평가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과 홍보활동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당 조례에서는 <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를 경기도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고려사항, 결과반영, 문화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다루고 있으며 전담기관 설치에 관하여 제13조 문화영향평가센터 설치에서 다루고 있음
- 이 경우와 같이 <문화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가칭 <인천광역시 문화정보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문화기본법>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

- 인천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미 대상사업에서 문화정보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내용적 수정은 불필요함

제4조 (대상사업)

재단은 제1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8.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사업 추진

(3) 인천광역시 문화정보화 및 전담기관 관련 자치법규 개선 방향

- 인천광역시의 문화정보화 사업 추진 및 전담기관 지정 관련 제도 개선 방향 검토
 - 기존의 문화예술진흥조례의 경우 근거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앞서 보듯 상위법령이 <문화예술진흥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조상 문화정보화 관련 내용을 담아내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기존 조례 개정	방식	신규 조례 제정
문화기본법(제11조)	상위 법령상 근거	문화기본법(제11조)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조례>	사례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등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 문구 수정·내용 추가	적용	<인천광역시 문화정보화 조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정보화 사업 실시 - 문화정보화 계획 방향 - 문화정보화 사업 위탁(기관 지정) - 재정의 지정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정보화의 목적 - 문화정보화 정의 - 지자체(시장) 책무 - 문화정보화 사업 내용 - 문화정보화 정책 고려 사항 - 관계 기관 협조 - 타 자치법규와의 관계(문예진흥조례, 문화도시조례 등) - 문화정보화센터 설치 및 선정(기관 지정) - 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문화도시조례 보완 - 효율적 제도화 추진 	강점	- 문화정보화에 대한 구체적 정책 방향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도시 조례에 대한 재해석과 의미부여 필요 - 문화정보화 사업의 해석과 구체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한계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신설의 절차적 어려움 - 별도 조례 신설에 따른 입법 효과성이 떨어짐

[표 12] 기존 조례와 신규 조례 비교

- 문화도시조례의 경우 기존 조례가 뚜렷한 상위법령과의 관계가 설정되어있지 않으나 서울시의 문화도시조례와 같이 <문화기본법>과의 관계를 설정한다면 문화정보화사업과 전담기관에 관한 내용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³⁾
 - 경기도 등의 문화영향평가 조례와 같이 별도의 <인천광역시 문화정보화 조례>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며 기존 문화도시 조례의 수정과 신규조례 제정을 검토하면 [표 12]와 같음
- 기존 문화도시 조례의 수정방향
- 기존의 문화도시 조례를 수정·보완하는 것이 입법의 효과성이란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짐
 - 기존의 문화도시 조례 수정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조례의 근거에서 문화기본법 등의 상위법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며 인천광역시의 전반적인 문화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조례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기존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수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과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표 13]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수정안

3) 그렇게 개정될 경우, 이후 문화정책 전담기관 지정과 문화영향평가 및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로도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문화정보화 사업에 대한 기본적 정의와 대상, 전담기관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추가할 필요가 있음

<p><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추가조항</p> <p>제5장 문화정보화 사업</p> <p>제24조(문화정보화 사업 추진) 시장은 「문화기본법」 제9조의 각호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문화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제25조(문화정보화 사업 대상) 문화정보화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 가운데서 제 17조에 따른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천광역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문화정보화 사업의 지원 2. 문화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무 3. 문화정보화 추진 및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4. 통계시스템을 통한 인천광역시 관내의 문화 분야 각종 조사 결과와 통계정보의 통합관리 5. 그 밖에 문화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p>제26조(문화정보화 기관 지정 등) ① 시장은 문화정보화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그 수행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p> <p>② 지정기관의 선정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7조 (재정의 지원) 시장은 문화정보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문, 교육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4) 문화도시 정책위원회를 지칭하며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제17조(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① 시장은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와 도시(계획·개발·재생·경관 등)영역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 신규 조례의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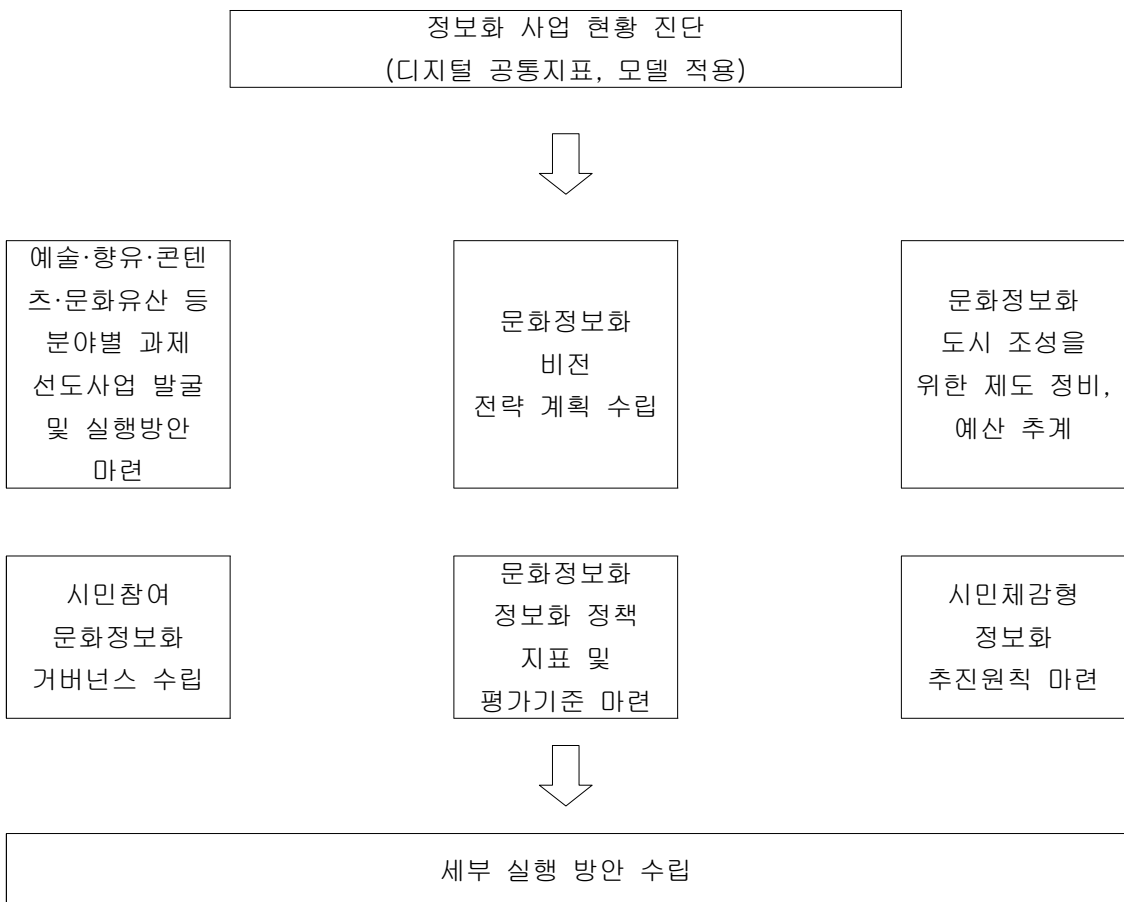
- 기존 문화도시 조례의 개정을 일차적인 방향으로 정하며 신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할 경우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2.4 문화정보화 전담 기관 지정 관련 기관의 역할

(1) 인천시의 역할

○ <인천광역시 문화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 인천광역시는 지역의 문화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문화정보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표 14] 인천광역시 문화정보화 시행계획 구성(안)

- 해당 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담겨있어야 하며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되는 지역현황에 따른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문화정보화 관련 조례 제·개정
 - 문화정보화 추진에 따른 내용을 담아 제도적 근거 마련
 -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거나 <인천광역시 문화정보화 기본조례> 제정
- 문화정보화 관련 예산 확보
 - 위의 문화정보화 시행계획에 따른 예산의 추계 및 공감대 마련
 - 문화정보화 사업에 지장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2) 인천문화재단의 역할

- <인천광역시 문화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추진
 - 인천광역시의 문화정보화 시행계획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종합연구 발주 및 수행
 - 해당 연구에서는 지역의 문화정보화의 현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술적인 시스템 구축과 실행을 위한 내용들을 담아내야 할 것임
- <인천광역시 문화정보화> 관련 추진 조직 마련 및 지역 공론화
 - 인천문화재단 내에 문화정보화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마련
 - 정책 및 기획조정부서의 장을 중심으로 문화정보화에 대한 재단 안팎의 정책을 조율하고 시행계획을 위한 후속 종합연구를 수행
 - 후속 종합연구를 토대로 지역의 문화예술계, 문화산업, 학계, 시민사회와의 폭넓은 공론장을 마련하여 공감대 형성

참고문헌

참고문헌

[연구보고서]

- 최원훈 외. 2004. 「공공기관 주도의 문화정보화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정보센터.
- 한국문화정보센터. 2010. 「문화정보화정책방향수립」.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정보원. 2019. 「2018문화정보화백서」
- 한국문화정보원. 2020. 「2019문화정보화백서」
- 서울특별시. 2015. 「서울디지털기본계획2020」.
- 조광호 외. 2017. 「새 정부 도시재생 방향 : 문화의 도입 연계를 위한 정책과제」. 문화관광 인사이트 99호
- 김연진. 2015.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문화예술 도입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장 훈. 2020.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종합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백선혜. 2019. 「서울시 문화분야 통계체계 구축 기본방향과 과제」. 서울연구원
- 김창수. 2018. 「2018. 인천점검, 도약을 위한 과제- 문화분야」. 인천연구원

[정책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8. 「문화비전2030」
- 문화체육관광부. 2020.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 인천광역시. 2019. 「인천 2030 미래이음 종합계획 수립보고」
- 인천광역시. 2020. 「2020년 인천광역시 정보화 시행계획」
- 인천광역시. 2020. 「제2차 인천광역시 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 인천광역시. 2019. 「제5차 인천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2019~2023)」

[기사·보도자료]

국정브리핑. 2004. 「안전한 사이버 세상 만든다」

미래한국. 2019.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인력양성」

SBS. 2018. 「지역문화의 미래 - 4차 산업혁명을 향한 지역문화원의 도전과 변화」

동아일보. 2020. 「문화체육관광, 관광-도서 등 주제별 620종 빅데이터 공개」